

연구보고서 2017-16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이상림 · 이지혜

【책임연구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6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이상림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68-8 93330

발간사 <<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요인은 중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저출산 정책 초기의 대응이 복지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일자리나 주거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주거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 문제가 출산에 대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주거는 다른 소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 비용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과 대출 그리고 주택 구입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 등의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혼부부가 느끼게 되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혹은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규모 확대, 부동산 시장의 변동, 가족의 지원, 양육에 적절한 주거지 선택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신혼부부의 생애과정과 상호 작용하면서 주거 마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는 단순히 자원의 규모로만 설명되지 않는 매우 복잡한 인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신혼부부의 생애과정의 변동과 주거 마련의 장기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라는 새로운 분석적 개념을 바탕으로 주거와 출산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에서도 이

리한 분석 개념 틀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자가 및 전세나 월세 등 점유형태에 따른 출산 확률의 차이 뿐만 아니라, 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대출이나 가족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점유형태 변화에 따른 출산의 차별성, 그리고 혼인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요인 등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흥미로운 결과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주거와 출산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심화하고 좀 더 진전된 신혼부부 주택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많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주거와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12
제3절 분석 개념 설정 및 연구방법	17
제2장 정책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27
제1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29
제2절 신혼부부 및 자녀양육 세대 주거지원 정책 해외 사례	43
제3장 신혼부부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51
제1절 신혼부부 분포	53
제2절 신혼부부 분포와 지역 출산율	63
제4장 주거생활주기 특성의 출산 결정 분석	75
제1절 기술 통계	77
제2절 분석 결과	8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5
제1절 출산지원으로서의 주거정책 방향성	107
제2절 맺음말	114
참고문헌	117

표 목차

〈표 2-1〉 지역별, 연도별 행복주택 승인 현황	32
〈표 2-2〉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택지원 정책	34
〈표 2-3〉 기금 대출 청년층(만35세 이하) 지원 현황	37
〈표 2-4〉 행복기숙사 지원 실적	38
〈표 2-5〉 희망하우징 공급 현황(2017. 6. 30. 기준)	39
〈표 2-6〉 지역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2015~2016)	42
〈표 2-7〉 일본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전국 계획) 목표 1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 자녀양육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생활의 실현’의 기본 시책	44
〈표 3-1〉 도시 농촌 지역별 신혼부부 비율 상위 5개 지역과 합계출산율 순위	63
〈표 3-2〉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이후 출산율 분포의 변화	67
〈표 3-3〉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68
〈표 3-4〉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남성, 1년 전 거주지 비교)	70
〈표 3-5〉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여성, 1년 전 거주지 비교)	71
〈표 3-6〉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남성, 5년 전 거주지 비교)	72
〈표 3-7〉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여성, 5년 전 거주지 비교)	73
〈표 4-1〉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78
〈표 4-2〉 신혼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79
〈표 4-3〉 신혼가구의 신혼 초기 주택 관련 변수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81
〈표 4-4〉 신혼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82
〈표 4-5〉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별 가구소득 및 부채	83
〈표 4-6〉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별 주택 가격 및 가족 지원 비율	84
〈표 4-7〉 연구 가설 변 분석 변인 구성	85
〈표 4-8〉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86
〈표 4-9〉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혼인연령)	92
〈표 4-10〉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	95

〈표 4-11〉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혼인연령) 97
 〈표 4-12〉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가족 지원) 99
 〈표 4-13〉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변화) 102

그림 목차

[그림 1-1] 일반화 순서로짓 모형의 분석 방식 24
 [그림 3-1] 혼인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연령 분포 53
 [그림 3-2]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 54
 [그림 3-3]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전국), 2015 56
 [그림 3-4]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 (수도권), 2015 58
 [그림 3-5]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충청, 대전, 세종), 2015 59
 [그림 3-6]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강원), 2015 60
 [그림 3-7]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전라, 광주), 2015 61
 [그림 3-8]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경상, 부산, 대구, 울산), 2015 62
 [그림 3-9]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전국), 2015 64
 [그림 3-10]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시구 지역), 2015 65
 [그림 3-11]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군 지역), 2015 65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Project Head · Lee, Sang-lim

The high housing cos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ost critical factors of the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The effects of housing characteristics, however, have been restrictively studied because of the lack of reliable data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on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who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anel data from Korea Housing Survey for Newly-married couple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life cycl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stability presented by housing tenure type, amount of debt, and family support for housing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and the timing of childbirth. Second, however, the effects are different by marriage life stage, such as birth order and marriage age. Third, number of migration does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r show even posi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2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which might mean a significant part of newly married couples give birth to baby or rear their children not at a their first pla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some housing policies to meet the demands of newly married couples who are going to have births, thereby to increase the fertility level in Korea.

*Key words: newly married couple, housing life cycle, childbirth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복지 지원적 접근에서 청년 일자리나 주택 문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하려는 구조적 접근(infra approach)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며, 주거와 출산은 매우 긴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우선적 선택을 위하여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 상태의 진행’과 ‘주거의 출산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 개념에 따라 혼인 시작 시점 및 현재 시점에서의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혼부부 분포와 출산 분석 및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신혼부부 인구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였으며 지역 단위 합계출산율 차이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정책 성과에 의한 출산력(fertility)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지역의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따른 인구이동의 결과로 인한 인구구성(population composition)에 의해 발생한 결과임을 밝혔다.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신혼 초기의 주거 특성이 계속적으로 출산 및 추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동(이사) 횟수가 출산을 낮추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주거 안정성 지표인 점유형태에서는 자가-전세-월세 순으로 출산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나 부채, 가족의 주거지원 등의 변수들은 출산 단계별로 구분된 분석 패널이나 연령과의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혼인생활 진전 혹은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동(이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자가로의 점유형태 전이가 출산을 유보하는 효과를 준다는 점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생활을 시작한 주택에서 출산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안정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혼부부는 부모의 자산 이전에 의존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가족 지원이 다시 출산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혼 초기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는 첫째아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전세비 상승이나 자가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출산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은 분석 결과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지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신혼부부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출산지원 정책으로서의 주거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출 중심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의 확대는 출산과 양육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같은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혼인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등 혼인생활의 진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혼인 초기의 신혼부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출산을 적극 지원할 수 없게 되므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등 생애과정에 따른 주거 확장 등의 수요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별 수요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 주거 안정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거시적 정책 운영에서 신혼부부나 저출산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서 주거가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출산 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저출산 및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단위의 출산과 관련해 인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비율과 같은 인구학적 맥락들을 배제한 채

6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지역 단위 합계출산율로 출산력을 판단하거나 지역 출산력의 문제를 정책 효과의 결과물로 단순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는 지역의 출산율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므로 신혼부부 유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혼인과 출산의 증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신혼부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거주는 일자리나 주택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불균형, 신혼부부 및 청년 인구 문제 등과 같은 지역 인구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정책에 신혼부부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 정책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의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 출산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거와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제3절 분석 개념 설정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및 사회 영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의 기피 혹은 출산의 연기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특정한 몇몇 요인들로 명쾌히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인구행동의 집합적 현상이다.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요인들은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양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부터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개인의 성취나 소비를 중요시하는 개인 중심 가치관으로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다양하다. 그리고 시간의 측면에서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부담과 같은 현재 요인들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 소득 혹은 기대 소비 수준과 같은 장기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서도 출산의 복잡성을 수용하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저출산 정책 초기에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한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청년의 일자리나 주택 문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통해 출산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적 접근(infra approach)을 시도하는 등 저출산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주택 문제는 특히

출산과의 관계에서 그 복잡성을 보여 준다. 주택 문제는 다른 재화의 소비 혹은 구매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일반적 재화의 소비는 구매 자체로 종결되지만, 주택은 저축-구매-대출 상황과 같은 매우 긴 시간의 구매 과정을 필요로 한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전세자금 마련 시 구매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소득의 저축이나, 향후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의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주택의 구입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산이나 소득의 축적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하는 단계적 진행의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산과 주거 마련은 우선적 선택을 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출산과 주거와의 관계는 점유형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시작 시 주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 및 부채 규모, 연령 및 혼인연차, 자녀의 수 등, 여러 가지 주거 관련 요인과 생애과정이 결합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들도 대부분 자가 소유가 차가에 비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다소 추상적 결론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도 통계적 가정들에 충실하지 못한 분석 방법을 비판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일반적 인식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는 예들도 발견된다. 요약하자면 높은 주거비용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매우 일반적인 공감대 속에서도 실제 주거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주거 상태의 진행’과 ‘출산에 미치는 주거의 장기적 영향’이

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거와 출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거생활주기는 주거의 특성과 영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진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혼인 시작 시점의 점유형태, 부채 규모, 주거 자산 규모, 부모지원과 같은 주거 관련 특성, 점유형태의 변화, 거주지 이동, 혼인생활의 진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연구는 그간 주거와 출산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혼인 초기의 주거 특성과 부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 초기의 특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높은 비용의 지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주택시장의 특성상 혼인 시작기의 주거 상황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부채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거 비용 마련이라는 현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자 부담과 부채 상황이라는 지속적인 지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주거에 대한 부담은 주거안정과 출산 간의 우선적 선택에 대한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 주거안정 확보 혹은 주거비용 마련을 위한 자가 구입, 전세자금 마련, 부채 상환, 저축 등에 자원이 배분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출산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출산의 비용은 단순히 출산 및 육아비용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활동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우선 주거와 출산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주거와 출산 관련 분석의 방법론 측면에 주목하여 기술하였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개념 프레임인 ‘주거생활주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해외의 주거지원 정책 사례로는 우리와 같은 고비용의 주거 환경 속에서 저출

산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주택의 비중이 높아 이를 바탕으로 세대 친화적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민간시장을 바탕으로 주거비용 지원에 집중하는 우리나라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인구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신혼부부 분포의 특성과, 신혼부부 분포와 지역 출산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신혼부부의 혼인 초기 주거 특성에 따라 출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주거생활주기’의 개념에 더 적절한 분석 방법인 일반화 순서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출산의 단계에 따라 주거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출산지원의 맥락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주거와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주거와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시도 단위의 분석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가구) 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으며, 시도 단위의 분석에서는 주로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민영, 황진영(2016)은 2009~2013년 16개 시도의 균형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합계출산율과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과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 부담이 증가해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이 출산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전현숙 등(2016)은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시도 단위의 거시적 분석과 개인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시도 단위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패널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영향이 가구 단위의 상황, 즉 자가인지 전세, 월세인지의 여부나 가계부채 등 가계 부담 상황, 그리고 자녀의 수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의 특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는 주택 점유형태나 주거비 부담, 소득이나 부채, 주택자산, 주거면적 등이 자녀수나 자녀출산 여부, 출산까지의 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현식(2017)은 재정 패널 1~7차(2008~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형태, 거주주택 외 주택소유 여부, 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여부, 금융자산의 크기, 부채의 크기, 가구소득 등 자산과 소득 관련 변수들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생존분석인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시간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녀의 경우 월세 및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가나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금융자산이 많은 여성이 금융 자산이 없는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이 낮았다.

거주주택 외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나 부채, 가구소득은 첫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부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경우 출산 위험이 높았다.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위험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형태나 부채나 소득 등과 같은 요인들이 출산 자녀 순위별로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천현숙 등(2016)에서는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거주환경이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거주환경이 출산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 부담이 많을수록, 자가를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출산 시기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출산을 연기하며 자가가 아니면 출산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자녀 출산 시점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배호중, 한창근(2016)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이 결혼 이후 첫째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 당시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일찍 출산하였으며, 거주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데이터를 풀링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부채에 대한 부분이 함께 분석되지 못하였으며, 첫 출산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

이 있다.

서미숙(2013)은 주거비용이나 주택 구매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가치가 변동하여 가구주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주택매매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가구주 부인의 출산율 감소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빗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점유형태 자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점유형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녀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거주자는 주거비용이 높아져 출산을 꺼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의 영향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자료의 문제로 인하여 출산 당시의 주거 상황이 아닌 현재 주거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출산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주거비용에 대한 전망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를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삼식, 최효진(2012)은 20~39세 유배우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현 주택사항과 결혼 당시 주택사항, 그리고 출산사항 등에 대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유형이나 점유형태, 주택면적 및 거주기간 등의 주거 형태가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OLS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가 거주인 경우 전세 거주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은 82㎡ 이하에 비해

115㎡ 이상인 경우 출생아수가 많았다. 이 연구는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 주거 특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점유형태 외의 자산이나 부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천현숙 등(2012)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9~2003년 중 혼인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경과된 가구(총 218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초기의 가구 특성인 소득과 부채, 주거 특성인 주거비, 주택 점유형태, 주거면적과 현재의 주거비 부담 여부, 주택 유형, 거주지역, 그리고 혼인 초기와 비교하여 현재 순자산 증가 여부, 주거면적의 증가 여부 등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OLS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혼인 이후 소득증가액이 클수록 그리고 혼인 초기 자가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경우 출산 자녀수가 적었으며, 혼인 당시 부채나 혼인 당시 주거비, 혼인 후 순자산 변화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혼인 초기의 주택과 출산에 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혼인 초기와 현재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주택 비용에 대하여 총체적 변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산력을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례수가 너무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혼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보유 시 자녀를 일찍 출산하거나 자녀수가 많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자가 거주 시 전세 거주에 비해 출생아수가 적다는 연구도 있고, 점유형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도 부담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다는 연구와, 부담이 클수록 출산을 연기한다는 연구, 주

거비 부담을 느끼는 경우 출생아수가 적다는 연구, 주거비의 영향이 없다는 연구 등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혼인 당시 부채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은 높을수록 자녀 출산 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가구 단위 분석의 경우 주로 현재 주거를 기준으로 과거의 출산을 분석하여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연구들 간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시점의 문제나 종속변수의 차이, 포함된 변수들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분석 개념 설정 및 연구방법

1. 분석개념: 주거생활주기

주거의 특성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들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점유형태 혹은 자산 가치 등과 같은 주거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왔다. 그러면 주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적 논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구성은 실태를 더욱 잘 바라보게 하는 시각의 틀을 제공해주고,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분석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주거 마련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우선 그 비용이 다른 어떠한 소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등 주거 마련은 그 소비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다시 말해 일반적 재화의 소비는 구매 자체로 종결되지만, 주

택은 저축-구매-대출 상황과 같은 매우 긴 시간의 구매 과정이 필요하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전세자금 마련 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현재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및 이자, 월세 등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앞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소득의 저축이나, 향후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의 상승에 대한 부담 등도 직접적 소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혼부부 가구의 가용 자원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산의 2) 개념을 제안한 Lutz 등(2006)은 앞으로 저출산을 지속시키는 원인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개인의 소비욕구 수준(personal aspiration for consumption)과 기대되는 실제 소득 간 차이의 증대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2)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설명은,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이 혼인과 출산력 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Easterlin(1980)의 상대소득 가설에서 발전한 논리이다. Easterlin의 가설에 따르면 부부(couple)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한다면 그들은 긍정적 예측을 하게 되고, 혼인과 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Easterlin, 1980).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은 성장기에 풍요로운 경제 환경에서 소비를 영유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 세대들보다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에 대한 욕구 수준과 실제 자신의 경제력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혼인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강화하는 요인

2) Lutz 등(2006)은 저출산의 2) 개념에서 저출산이 앞으로 지속되게 되는 주요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출산아수를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적 요인은 적은 형제수를 경험한 인구집단은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가족이 이상화되어 자신도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의 논의는 저출산 문제 지속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설명이지만, 이것은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설명 고리를 제공해 준다. 첫째, Lutz 등(2006)의 경제적 요인 설명은 소비와 출산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 경제 수준 혹은 구매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절대 빈곤과 같은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소비 여건에 따라 출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안정적 주거 마련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혹은 회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Lutz 등(2006)의 가설은 소비와 출산 간의 경쟁 관계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거 비용에 대한 예상이 출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비용이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미래의 주거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게 되고, 이는 현재의 출산 문제에 더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주거 마련을 위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Lutz 등(2006)의 가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거생활주기’ 개념으로 주거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주거의 특성이 장기간에 걸쳐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시도한 바와 같이 횡단적 특성만으로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주거는 부부의 생애주기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데, 이는 단순히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출산, 자녀의 성장 등과 같은 혼인생

활 진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혼인생활 진전에 따라 더욱 안정된 주거를 찾게 되고 더욱 넓은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부의 혼인생활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주거(주택) 상태의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적 도구로 이 연구에서는 주거생활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주거생활주기 개념으로 주거와 출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면 부부생활의 진전에 따라 분석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다양한 주거 특성이 혼인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주택 점유형태, 부채상황, 자산 가치, 부모지원 등의 다양한 주거 관련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혼인생활 진전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상호작용 또한 분석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주거생활주기는 주거 특성과 출산 간의 상관성에 대한 횡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된다.

‘주거생활주기’의 개념에 따라 이 연구 분석에서 확인하고자 주요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른 차별출산력.
 - 이동(이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수의 수가 적을 것.
- 주거 관련 비용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신혼 초기 주택 관련 대출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부모로부터의 주거 마련 비용 지원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주거변동 비용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차가에서 자가로의 전환은 출산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2. 연구방법론

가. 전체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신혼부부 인구분석 그리고 주거 특성과 출산 간 상관성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특성 인구분석

주로 통계청의 2015년 신혼부부 통계를 활용하여 이들이 갖는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신혼부부의 시군구 단위 지역 분포를 알아보고, 이를 지도화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비율과 지역의 출산율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서 신혼부부 비율이 미치는 영향(인구구성 요소, population composition)과 출산력 수준(fertility) 요소를 구분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시군구 단위 출생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신혼부부 구성 비율을 표준화한다. 더불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이동성을 알아보고, 신혼부부의 비율과 지역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 통계 분석

주거 특성과 출산 간 상관성 분석은 2014~2016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 분석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혼인생활 진전과 주거의 장기적 영향을 결합한 ‘주거생활주기’ 개념에

적합한 분석 방법과 모델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분석에서는 일반화된 순서로짓(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의 부분비례오즈모형(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형 사용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는 아래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이 분석에 종속변수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자녀수와 잠재적 완결 자녀수를 의미하는 계획자녀수를 함께 사용하여, 그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분석 결과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 독립변수들은 신혼 초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용 부채 규모, 주거비 중 가족 지원과 유산 기대,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 주거 이동 횟수 등이다. 이들 변인들 중 일부는 혼인연령과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교란변인으로는 혼인 초 거주지역, 혼인기간, 아내 교육수준, 아내 혼인연령, 연소득(로그), 혼인 초 맞벌이 여부 등이 있다. 여기에서 아내의 현재 연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연령, 혼인기간, 현재 연령 간에 강한 공선성을 갖기 때문이다(현재 연령 = 혼인연령 + 혼인기간).

○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앞서 설명한 통계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자 및 대안적 주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한다.

나. 주거 특성의 출산 결정 분석

지금까지 주거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생존분석과 일반 회귀분석(OLS)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서 실제 사건의 발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는 생존분석은 주거와 출산 간의 분석에 심각한 방법론적 전제 조건을 위반하는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주로 첫 자녀 출산이나 다음 자녀 출산 등과 같이 하나의 사건의 발생 위험을 분석하기 때문에 종합적 출산 수준의 문제(출산자녀수)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발생 사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인, 예를 들어 현재자녀수와 추가 출산 의향이 합쳐진 계획자녀수 등은 분석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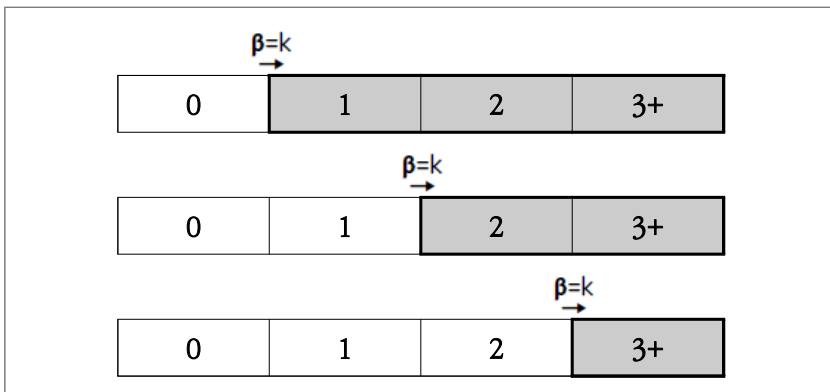
반면 OLS 회귀분석은 출산자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종합적 출산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0 이상의 카운트 변수인 자녀수를 연속형 변수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OLS 회귀분석은 심각한 통계적 문제가 있다. 우선, 사례가 0 보다 작은 마이너스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지지 구간이 이를 넘어서게 되어 그 값의 유의성이 과대 추정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수의 의미가 과연 등간적인가 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에 Wang과 Famoye(1997)는 실제 출산자녀수의 문제에 맞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회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카운트(count)변인에 적합한 포아송 회귀모형(Generalized Poisson Regression Model)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녀수 분석에서 포아송 회귀모형 역시 한계를 갖는데, 이 역시 일반적으로 출산자녀수 분석에서 종속변수의 분산이 평균과 같아야 한다는 포아송 모형의 전제를 위반하게 된다(김현숙, 2007).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순서로짓(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의 부분비례오즈 모델(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일반화된 순서로짓보다 독립변수 효과가 범주형

변수의 여러 수준이나 계급에 걸쳐 동등하다는 평행선 모델(parallel-lines model)의 가정으로부터 더 자유로우면서도, 직관적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Williams, 2006).

일반화 순서로짓에서 종속변수는 각 변수 값이 단계로 구성된 서열척도로 해석된다. 이 분석에서는 각 단계별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누어 발생 확률을 분석한다(그림 1-1) 참고). 이는 각각의 변수값과 그 외 변수값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로짓 분석이나, 하나의 기준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다항로지스틱 분석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일반화 순서로짓 분석 방식은 출산의 각 단계(출산 순위)로의 전이에 따라 출산에 대한 결정요인들이 갖는 영향의 차별성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화 순서로짓 모형은 방법론적으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과정 혹은 혼인생활의 진전에 따른 주거의 출산 결정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한 이 연구의 ‘주거생활주기’ 개념에도 더욱 부합한다.

[그림 1-1] 일반화 순서로짓 모형의 분석 방식



이 연구 분석에서는 두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현재 출산아수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자녀수와 추가 출산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출산아수이다. 전자의 경우는 실제 출산력을 보여주지만, 분석 대상이 혼인 5년 차 이하의 신혼부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따라 출산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출산아수는 미래에 발생할 완결출산에 가까운 개념으로 실제 출산아수 변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 여기서 계획출산아수는 이상자녀수와 같이 고정된 측면이 강한 출산 관련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후 생활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변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결정계수의 차이는 혼인 초기의 주거 특성이 출산 시기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 두 개의 변인을 사용한 분석은 신혼 초 주거 및 기타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제 2 장

정책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제2절 신혼부부 및 자녀양육 세대 주거지원 정책 해외 사례

2

정책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

제1절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³⁾

신혼부부는 청년층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 일부 청년층에 대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우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도 해당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중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정책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주택지원으로서 임대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 비용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 역시 신혼부부와 같이 주택지원으로서 임대주택이 있고, 비용 지원으로서 월세대출이 있으나 신혼부부와는 달리 기숙사를 지원하는 유형이 하나 더 있다.

1.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현황

가. 임대주택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3) 주거지원 정책 내용은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7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마이홈포털이 아닌 다른 자료를 참고한 경우,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였음.

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이 중 행복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으며 전용면적 45㎡ 이하이면서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공급 중 젊은 계층(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 80%를 공급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지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서, 2013년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7).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기준은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 자격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해당(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는 대학생 또는 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했으나, 2016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무자녀 시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뉘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100% 이하를 충족해

야 한다. ‘대학생’ 자격은 해당(연접)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취업 준비생’은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부모는 해당(연접) 지역 외 거주)하거나 졸업한 학교가 해당(연접) 지역 소재이면서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까지이다. 사회초년생 계층은 ‘사회 초년생’, ‘재취업 준비생’으로 구분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인 경우이다. ‘사회초년생’ 자격은 해당(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이거나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다. ‘재취업 준비생’은 해당(연접) 지역 소재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5만 호 사업 승인을 계획하여 이미 승인을 완료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연도별로는 2014년 2만 6천 호, 2015년 3만 8천 호, 2016년 3만 8천 호, 2017년 4만 8천 호를 승인하였다. 지역별 행복주택 승인 현황을 보면 주택 가격이 비싸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인구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63.5%로 가장 많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전체 사업승인 물량 10만 2천 호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3만 6천 호 확보하였으며, 전체 15만 호 중에서는 신혼부부용 투룸을 5만 6천 호 공급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32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표 2-1〉 지역별, 연도별 행복주택 승인 현황

(단위: 호)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율)
서울	3,571	2,784	2,521	12,754	21,630	(14.4)
부산	-	2,602	795	3,643	7,040	(4.7)
대구	2,108	404	2,320	100	4,932	(3.3)
인천	2,320	3,404	1,100	1,915	8,739	(5.8)
광주	2,102	700	1,649	140	4,591	(3.1)
대전	182	-	1,210	2,566	3,958	(2.6)
울산	-	1,046	800	-	1,846	(1.2)
세종	-	1,950	270	-	2,220	(1.5)
경기	11,226	15,098	19,832	18,982	65,138	(43.3)
강원	-	580	330	895	1,805	(1.2)
충북	295	1,418	1,014	732	3,459	(2.3)
충남	2,922	2,590	1,270	880	7,662	(5.1)
전북	612	545	1,000	280	2,437	(1.6)
전남	-	650	450	1,290	2,390	(1.6)
경북	-	410	1,856	860	3,126	(2.1)
경남	480	3,756	1,244	1,740	7,220	(4.8)
제주	-	-	528	1,634	2,162	(1.4)
계	25,818	37,937	38,189	48,411	150,355	(100.0)

자료: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건설량의 10%를 몇몇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는데, 우선공급대상 중 신혼부부가 포함되어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이나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이며 이 안에서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인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 중 일부를 유자녀(임신 중 포함)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30퍼센트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전용면적별 소득기준 등) 신청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2010~2014년 총 7만 6천 호(연평균 약 1만 5천 호)를 공급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소득기준과 입주자저축 기준 충족 시 그중 일부를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모는 건설량의 15% 범위(민간은 10%)이다(대한민국정부, 2017).

전세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장기전세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시중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과 일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34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표 2-2〉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택지원 정책

		개요	신혼부부 ¹⁾ , 청년층 자격	임대 기간	
임대 주택	행복 주택	신혼부부 대상	일정 소득 이하, 해당 지역 근무 또는 거주 무주택, 혼인 예정자	자녀수에 따라 6~10년	
		청년 대상	일정 소득 이하, 해당 지역 근무/거주/소재 대학 무주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재취업 준비생	6년	
	연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목적,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유자녀 무주택 수급자(일부 우선공급)	50년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	일정 소득 이하,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일부 우선공급)	30년
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일정 소득 이하, 청약저축 기준 충족,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		
전세 주택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토지구획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임신 포함 유자녀 무주택, 청약저축 기준 충족, 일부 소득기준 충족(일부 우선공급)	20년
	전세 임대	신혼부부 대상	도시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 예비 부부 포함, 자녀 유무는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짐.	20년
청년 대상		대학생, 취업 준비생,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기준 달라짐.		20년	

주: 1)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임.

자료: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7. 7. 인출.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택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순위별로 차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적용되

며, 순위별로 다양하게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혼인 예정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15년까지 3만 3천 호가 공급되었고, 2016년에는 5천 1백 호가 공급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7). 2017년에는 4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17).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2017년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17).

나. 내 집 마련 및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내 집 마련 비용이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중 신혼부부는 전세대출과 내 집 마련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신혼가구는 6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비도시 지역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혼가구(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4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대출 금리는 연 2.3%~2.9%이나 신혼가구는 0.7%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며 4회 연

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 시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10~30년까지 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25~3.15%이나 신혼가구는 연 0.2% 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관련하여 전체 대출 인원 중 청년층(35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2015년 30.3%에서 2016년 11월 기준 40.5%로 증가하였으며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2015년 41.8%에서 2016년 11월 기준 51.7%로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자금을 연 2.5%의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기한 2회 연장부터는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 적용).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은 연 1.5%의 우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3〉 기금 대출 청년층(만 35세 이하) 지원 현황

(단위: %)

구 분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21-25	26-30	31-35	청년 합계	36-40	40대	50대	60대	21-25	26-30	31-35	청년 합계	36-40	40대	50대	60대	
'15	3월	0.1	2.6	26.5	29.2	31.6	27.3	8.9	3.1	0.3	5.2	30.7	36.2	24.4	20.7	11.2	7.5
	6월	0.1	2.7	25.1	27.9	31.0	27.3	10.5	3.3	0.5	10.6	29.4	40.5	21.7	19.4	11.1	7.2
	9월	0.1	3.6	31.1	34.8	30.4	23.6	8.7	2.5	0.4	12.8	33.2	46.4	20.5	16.6	9.5	7.0
	12월	0.1	4.1	28.9	33.1	30.8	24.8	8.3	2.9	0.5	16.1	30.2	46.8	19.5	17.3	9.7	6.8
	평균	0.1	3.0	27.2	30.3	31.0	26.8	8.9	3.0	0.4	10.4	31.0	41.8	21.7	19.2	10.4	7.0
'16	3월	0.3	5.9	31.8	38.0	29.6	23.0	7.0	2.4	0.7	18.5	31.6	50.8	18.2	15.9	9.1	5.9
	6월	0.2	5.2	31.3	36.7	27.2	23.9	9.1	3.0	0.8	16.7	27.5	45.1	17.0	16.6	12.0	9.3
	9월	0.5	6.8	35.9	43.1	26.5	20.2	7.7	2.5	0.9	20.3	31.4	52.6	18.1	14.6	8.6	6.2
	11월	0.3	7.2	32.9	40.5	26.9	21.5	8.4	2.8	1.0	20.9	29.8	51.7	16.7	15.2	9.4	7.0

자료: 국토교통부, (2016). 내부 자료.

다. 기타

임대주택이나 주택마련 비용 대출 지원 외에 청년층의 경우 정부에서는 공공기숙사인 행복기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희망하우징이라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의 부족한 거주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 대학 부지 내에 건립하여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공공)기숙사와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여 인근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로 나뉜다. 학점이나 출신 지역(거리)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 등)은 우선선발(행복(공공)기숙사는 전체 수용인원 중 15% 이상)하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비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관리비를 포함하여 행복(공공)기숙사는 월 24만 원 이하, 행복(연합)기숙사는 월 19만 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기준 2만 99명에 대한 주거 시설을 확보하였다.

〈표 2-4〉 행복기숙사 지원 실적

구분	지원 사업수(개)		수용 인원수(명)		지원 금액(억 원)	
	공공	연합	공공	연합	공공	연합
2012	6	1	3,092	516	668	159
2013	7	-	4,012	-	992	-
2014	10	1	5,377	1,528	1,412	375
2015	5	1	1,298	750	346	205
2016	7	1	2,926	600	798	164
계	35	4	16,705	3,394	4,216	902

자료: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저소득층 등이며 부모 등이 서울 제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우선순위 등에 따라 소득기준, 거주지역 등 상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요건 유지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희망하우징은 200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기준 총 765호, 1315실을 공급하고 있다. 평균 임대료는 비수급자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다가구형은 월 11만 5천원, 원룸형은 월 19만 5천원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2017).

〈표 2-5〉 희망하우징 공급 현황(2017. 6. 30. 기준)

연도	공급호수(호)	공급실수(실)
2009	61	135
2010	40	83
2011	64	146
2012	216	384
2013	58	129
2014	73	131
2015	15	30
2016	192	259
2017	85	100
합계	765	1,315

주: 2017년 총 200호 250실을 공급 계획 중이며, 6월에 85호 100실 모집 공고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 모집 공고 예정임.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내부 자료.

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2년까지 20만 호(전체의 30%)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비용 지원 강화의 경우에는 20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경감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임대주

택의 경우에는 약 30만 실 공급을 목표로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임대주택 5만 실과 역세권 등 주변에 청년주택 20만 실,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더 늘릴 예정이다.

마.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 8. 2.)

2017년 8월 2일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7). 이번 방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여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정책 중 직접적으로 청년층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신혼부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연간 4만 호(5년간 총 20만 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연평균 1만 호 규모로 하여 총 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시장 수요를 보아 가며 물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할 것이며 이와 연계된 주택기금 대출상품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평가

우리나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게 임대주택 보급과 주택자금 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크게 제한된다. 이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으로서 저출산 정책의 방편이 되기에는 그 대상이 절대로 부족하며 그 대상으로 청년층에 해당하는 일반 신혼부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저렴한 임대료와 적절한 입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부지 확보에서부터 한계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한 해 결혼 건수가 약 30만 건에 이르고,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도 약 25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급은 1천 채를 겨우 넘는 수준이므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제적으로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은 원룸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투룸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로는 원룸이 적절할 수 있지만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다.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나타났던 기존 주민들의 반발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청년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 2-6〉 지역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2015~2016)

(단위: 호)

구분	공급량	신혼부부 공급량	신혼부부 공급량 비율
계	4,386	1,078	24.6%
서울	1,405	445	31.7%
대구	1,088	372	34.2%
인천	140	0	0.0%
경기	1,458	253	17.4%
충북	295	8	2.7%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주택공급 지원의 다른 형태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처음 정책 취지와는 달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성이 떨어져 국민 혜택보다는 사업자의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은 처음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임대료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몇몇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같은 면적의 주택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양도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주택기금 용자와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등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전환 되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수익은 보장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지원의 다른 방식인 주택자금 지원은 재원의 한계로 수혜 대상이 제한되며, 최근의 높은 전셋값 상승에 비해 지원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준비된 예산은 약 4조 5천억 원 수준인데, 가구당 1억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불과 4만5천 가구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주택비용 상승 경향 속에서 대출로 이루어지는 자금지

원은 다른 측면에서 주택비용을 올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무리 낮은 이자율로 지원되더라도,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금융 부담은 앞으로의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제2절 신혼부부 및 자녀양육 세대 주거지원 정책 해외 사례

1. 일본

일본은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주거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2006년 제정함에 따라(윤주현 등, 2006) 2006년부터 매 10년 동안의 주택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이태진 등, 2016).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수립되었고 2016년에 다시 10년간의 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 수립되었다(이태진 등, 2016). 2016년에 수립된 계획은 8개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 1~3이 거주자 관점에서의 목표이고 목표 4~6은 주택 재고 관점에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목표 7~8은 산업·지역 관점에서의 목표이다(国土交通省, 2016).

거주자 관점의 목표 세 개 중 첫 번째가 바로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자녀양육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생활의 실현’이다(国土交通省, 2016).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자녀양육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생활의 실현’은 (1)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나 자녀양육 세대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확보할 수 있는 환경 정비, (2)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정비 그리고 (3) 희망출산율 1.8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6). 기본 시

책은 <표 2-7>과 같다.

<표 2-7> 일본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전국 계획) 목표 1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자녀양육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생활의 실현'의 기본 시책

구분	내용
(1)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자녀양육 세대가 필요로 하는 품질과 넓이의 주택(민간임대, 공공임대, 주택 소유)에 수입 등 가구 상황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실시 ① 민간임대주택을 자녀양육 세대용으로 리폼하는 것을 촉진하여 민간임대주택 활용 ② 자녀양육 세대 등은 공영주택에 우선입주, UR 임대주택 등 임대료 저렴화 등으로 공적 임대주택에 입주지원 ③ 자녀양육 세대 등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매력적인 기존 주택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 등으로 주택 취득을 지원
(2)	세대 간 서로 도우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3세대 동거근거리 거주 촉진
(3)	거주지 근처에 자녀양육 지원 시설 입지 유도 등으로 지역 모두가 아동을 양육하는 환경 정비 추진

자료: 国土交通省. (2016).

첫 번째 기본시책은 가구 수입 등 상황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주택취득 지원으로 젊은 세대나 자녀양육 세대가 필요로 하는 품질과 넓이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대 간에 서로 도우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3세대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세 번째는 거주지 근처에 자녀양육 시설을 유도하여 지역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国土交通省, 2016).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는 성과지표의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고 있는데, 자녀양육 세대(18세 미만 포함 세대)의 유도주거면적수준달성률이 2013년 현재 전국 42%, 대도시권 37%였으나, 2025년에는 전국 및 대도시권 모두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6).

이와 같이 일본의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은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할 만큼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보다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 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크게 ‘공영주택’, ‘지역 우량임대주택’, ‘UR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영주택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력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이 있다(윤혜영, 유해연, 2014). 공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하위 25%이나, 조례에 따라 하위 50%까지 설정 가능하며 신혼 및 육아세대의 경우 자녀 유무는 상관이 없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지역 우량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 주택의 확보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실시하는 제도이다(윤윤정, 천현숙, 2013; 윤혜영, 유해연, 2014). 이는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양호한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 우량 임대 주택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윤혜영, 유해연, 2014). 공공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주요 공급 주체로 소득기준은 하위 80%(2015년도 신규부터는 하위 70%)에 해당하며 동거인에게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임신한 자녀가 있는 육아세대나 배우자를 얻은 지 5년 이내이며 지방공공단체가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세대인 경우 입주할 수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UR임대주택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현재는 기존 임대주택을 관리하여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갖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혜영, 유해연, 2014). 도시재생기구(UR)가 주요 공급 주체이며 젊은 세대와 육아세대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임대료 절감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수

입에 따른 입주 제한이나 자녀 유무에 따른 제한은 없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또한 단지 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원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을 유치하거나 빈집을 활용하여 보육사업자 등이 가정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실을 개보수하여 육아세대를 포함한 주택취약 세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확보 요배려자 안심주거추진사업'도 실시하고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입주 대상자는 자녀양육 세대를 포함한 요배려자 중 수입 분위 25% 이하로 주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중에 주거지원협의회가 인정한 세대로 공영주택의 임대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다(이상림 등, 2016).

이와 같은 주택 지원 외에도 일본 지자체나 민간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지원 주택으로 인증하는 친육아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문승엽, 최정민, 2016). 지방 공공단체는 공공주택 정비 시, 육아를 배려한 기준을 설정하고 육아지원 시설 병설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육아를 고려한 주택 건설 및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그리고 앞서 주생활기본계획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육아세대가 이들 부모세대와 동거하거나 주변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하세가와 히로시, 2015). 2002년 스미다구는 일본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스미다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시작하였고, 민간에서는 2006년부터 미키하우스 육아종합연구주식회사에서 인증제도를 시작하였다(이연숙 등, 2016).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보육 시설이나 놀이터 등을 건립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완화된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승엽, 최정민, 2016).

2. 싱가포르⁴⁾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전체 주택시장의 90%에 달하는 공공주택시장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있다(강미나, 박미선, 2013).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강미나, 박미선, 2013),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이 많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함에 따라 1987년 M&P 패키지(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정책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신윤정, 2014). M&P 패키지는 크게 결혼 지원, 임신 및 자녀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나뉘며, 주택 지원 관련 정책은 결혼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주택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청(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70%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45% 정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므로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도움을 준다(두성규, 김현아, 2012).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미

4) 싱가포르 M&P Package 홈페이지(www.heybaby.sg/mppackage)에서 2017. 10. 인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출처가 다른 경우 해당되는 내용에 출처를 표기하였다.

리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도와주기 위해 Staggered Downpayment Scheme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커플 중 한 명 이상이 신청 당시 30세 이하인 경우 두 단계에 걸쳐 10%의 계약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도 일본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고자 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을 이용하여 주택 신청 시, 부모 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나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보다 기회를 두 배 더 주고 부모와 같은 집에 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회를 세 배 더 준다.

주택 지원 중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반적인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Third Child Priority Scheme을 통해 공급 주택의 5%를 별도로 할당하여 공급하며, 일반적인 유자녀 가구 중에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임신 중 포함) 결혼한 커플이 처음 신규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Parenthood Priority Scheme(PPS)을 통해 일정 비율을 할당해 놓고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는 공공주택 구입 시 중앙연금기금(CPF)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강미나, 박미선, 2013),⁵⁾ 신규 주택으로 첫 주택 구입 시, 소득이 5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4만 달

5) CPF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으로 싱가포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은퇴 이후의 삶, 건강, 자가 소유 등을 위해 운용되는 종합사회 안전저축으로 매칭펀드형 강제저축 프로그램이다. 이 기금의 3가지 계정(일반계정, 특별계정, 의료계정) 중 일반계정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강미나, 박미선, 2013).

러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Additional CPF Housing Grant (AHG)에 지원할 수 있다. 소득 8500달러 이하이며 구입 주택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만 달러까지 지원해 주는 Special CPF Housing Grant (SHG)에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주택이 아닌 재판매 주택의 경우 처음 결혼·약혼한 커플이 재판매 공공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이 1만 2000달러 이하이고 주택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5만 달러를 지원하는 Family Grant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첫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으로 AHG에 지원할 수 있다. 부모나 기혼 자녀 근처에 거주하기 위해 재판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만 달러의 Proximity Housing Grant(PHG)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주택 시장의 목표는 자가소유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주택 자가보유율이 90.5%에 이르고 있으며(백승기, 2016) 임대는 일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극빈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과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주가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임시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강미나, 박미선, 2013). 결혼한 커플이 새로운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을 시세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Parenthood Provisional Housing Scheme (PPHS)을 이용할 수 있다.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일본과 싱가포르의 신혼 및 자녀양육 세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주택 지원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정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소득계층별로 그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거주지 근처에 자녀양육 지원 시설을 유도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나 민간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에 자녀양육 환경 조성 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제도를 완화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생애 첫 주택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물론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주택의 대부분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공주택의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택 분양 시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 첫 주택 비율을 더 높이거나 생애 첫 주택인 경우 이들의 자금 유동성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공통점으로는 부모 세대와 자녀양육 세대의 근거리 거주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양육 시(특히 맞벌이 가정인 경우)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주거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신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제1절 신혼부부 분포

제2절 신혼부부 분포와 지역 출산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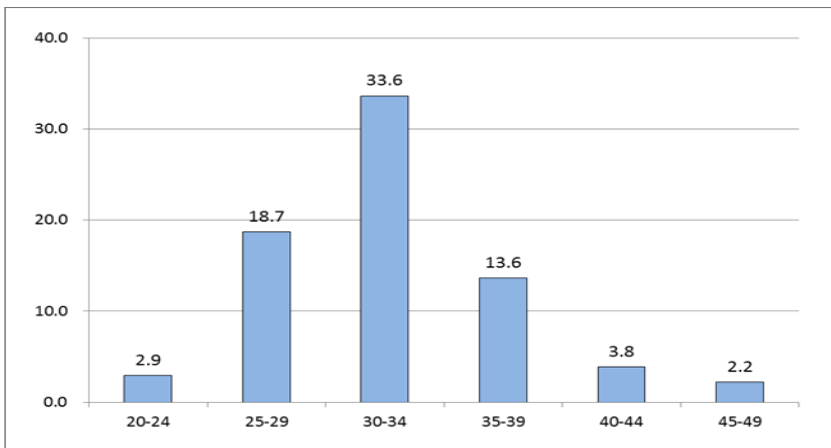
신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제1절 신혼부부 분포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연령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인다. 신혼부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여성 기준, 30대 초반 집단인데 전체 여성 인구의 33.6%를 차지한다. 이 연령 집단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만30세 초반(2016년 30.1세, 통계청 혼인통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혼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혼인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연령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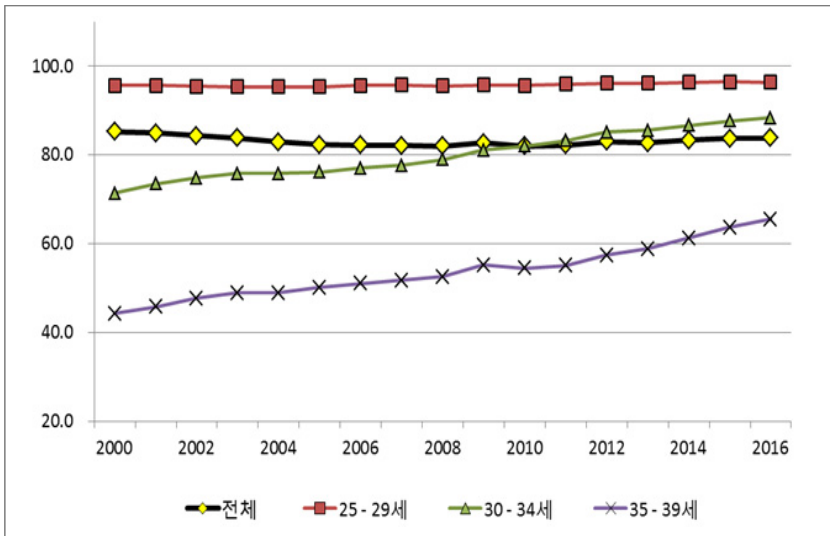
주: 외국 국적 여성 제외.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우리나라 인구 현상에서 신혼부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의 출산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8%에 이른다. 신혼부부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의 상당 비율이 혼인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주거지원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은 전체적 출산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2017d). 출생 통계(각 연도).

그러나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의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분포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연령 집단의 출산에서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고연령대에서도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혼화 추세와 관련이 깊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7년에 만 28세를 넘었고 2016년에는 만 30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e).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혼인 적령기에 혼인이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이상림, 2013)되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여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혼인함에 따라 30대 초반 연령대의 출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출산이 1명~2명에 그치는 저출산의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 만약 혼인 연기 추세 속에서도 셋째아 이상 출산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35세 이상 연령의 출산 비율도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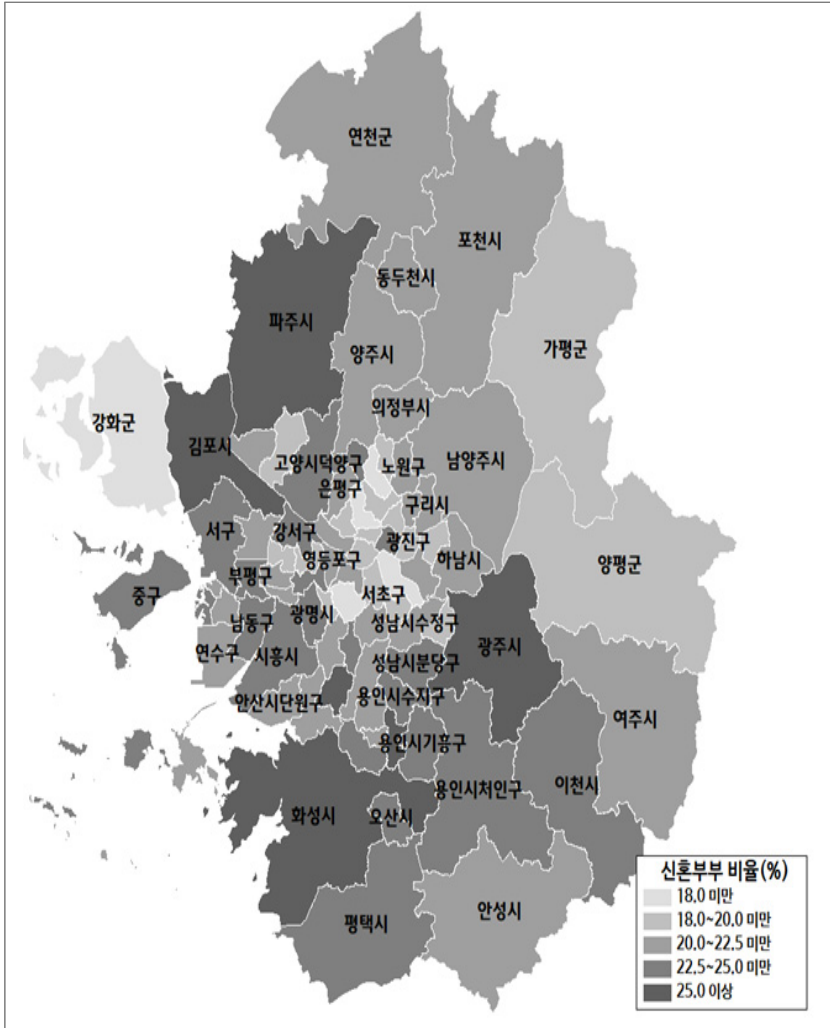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부부의 지리적 분포는 신혼부부의 주거수요와 관련되어 있어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신혼부부의 수는 당연히 인구 크기와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성 인구 중 혼인기간 5년 이하의 기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비교 대상 여성의 연령 구간이 너무 넓은 경우, 그 차별성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특정 연령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출산 연령대인 25세~39세 여성 인구에서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에서 이 연령 집단의 여성 출산 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91.7%에 이른다(통계청, 2017d).

[그림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혼부부의 분포는 내륙 농촌지역들에서 확연히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 지역의 높은 인구고령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적은 인구 구조로, 젊을수록 인구비율이 작아지는 역삼각형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달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광역시) 지역에서 차지하는 신혼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이들 대도시 지역에서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내륙 농촌 인구와는 달리 젊은 여성인구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신혼부부의 분포는 지역적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지역적 차이의 분포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서울은 신혼부부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지역들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시(27.2%), 수원시 영통구(26.8%), 화성시(26.5%), 김포시(26.2%), 파주시(25.1%) 등 서울과 근접하지 않은 지역들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은 2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립 등(2016) 연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최근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이 일어난 신규 아파트 대단지 지역들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지역에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최근 신혼부부들의 이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강서구(23.9%), 구로구(22.9%), 성동구(22.8%), 노원구(22.2%), 영등포구(22.1%), 은평구(21.0%) 등으로 주거비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 신혼부부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와 관련된 신혼부부의 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 (수도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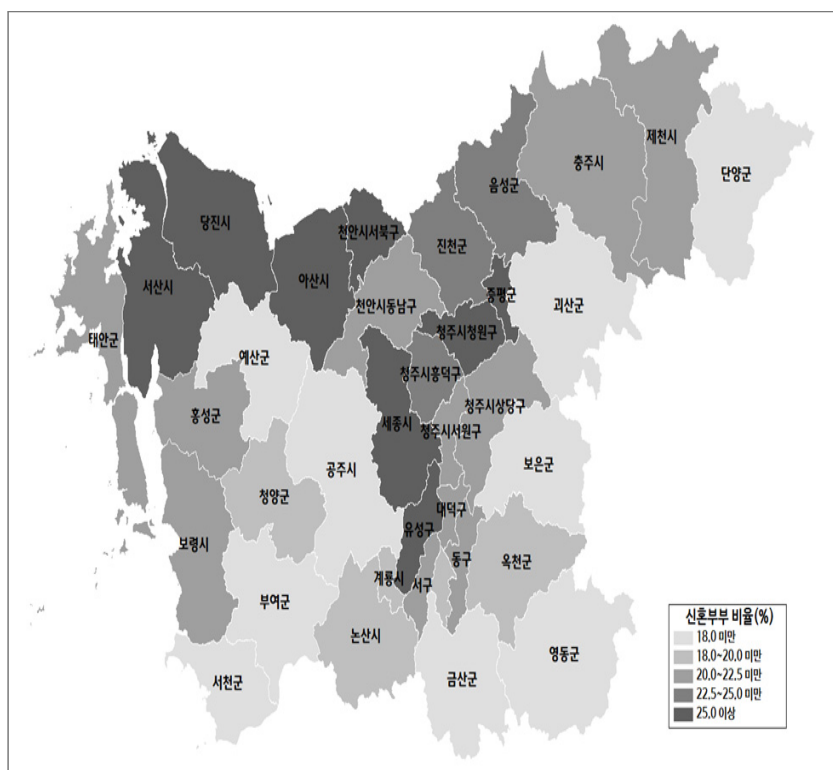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수도권 외 지역들에서 신혼부부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은 일자리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나 구 단위 도시 지역들이나 혹은 완주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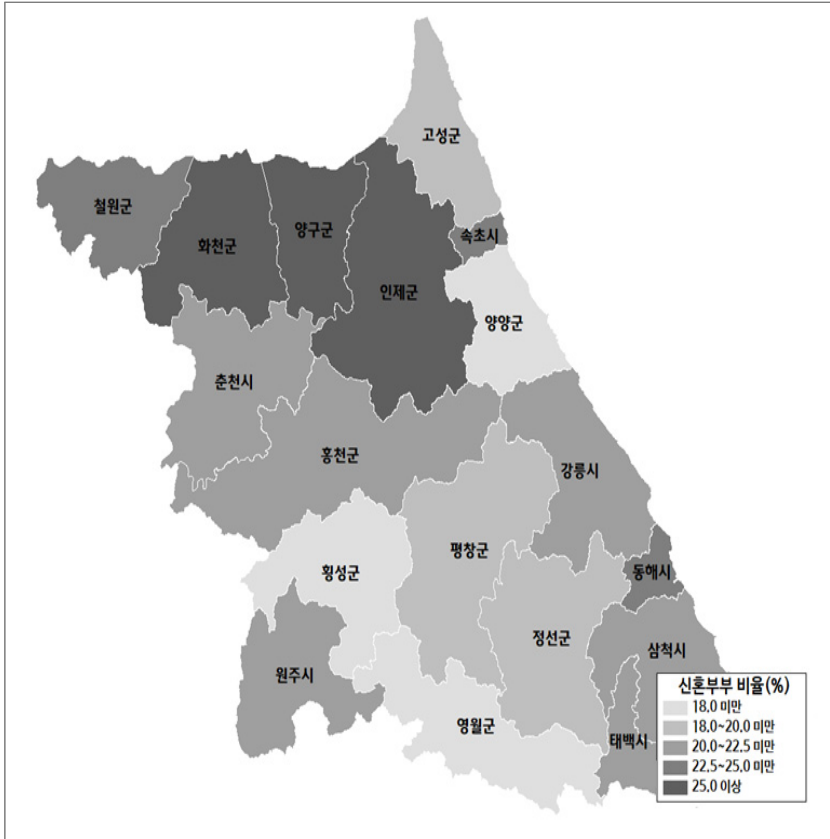
같이 도시 인근 베드타운이 형성된 주변 지역들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역들도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남도 지역이다. 군인 인구가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화천군(29.1%), 인제군(27.6%), 양구군(25.9%), 철원군(24.4%) 등 북부 지역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나주시(26.9%)와 광양시(26.4%)를 제외하면 영암군(26.3%)과 해남군(26.0%) 등 연안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았다.

[그림 3-5]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충청, 대전, 세종),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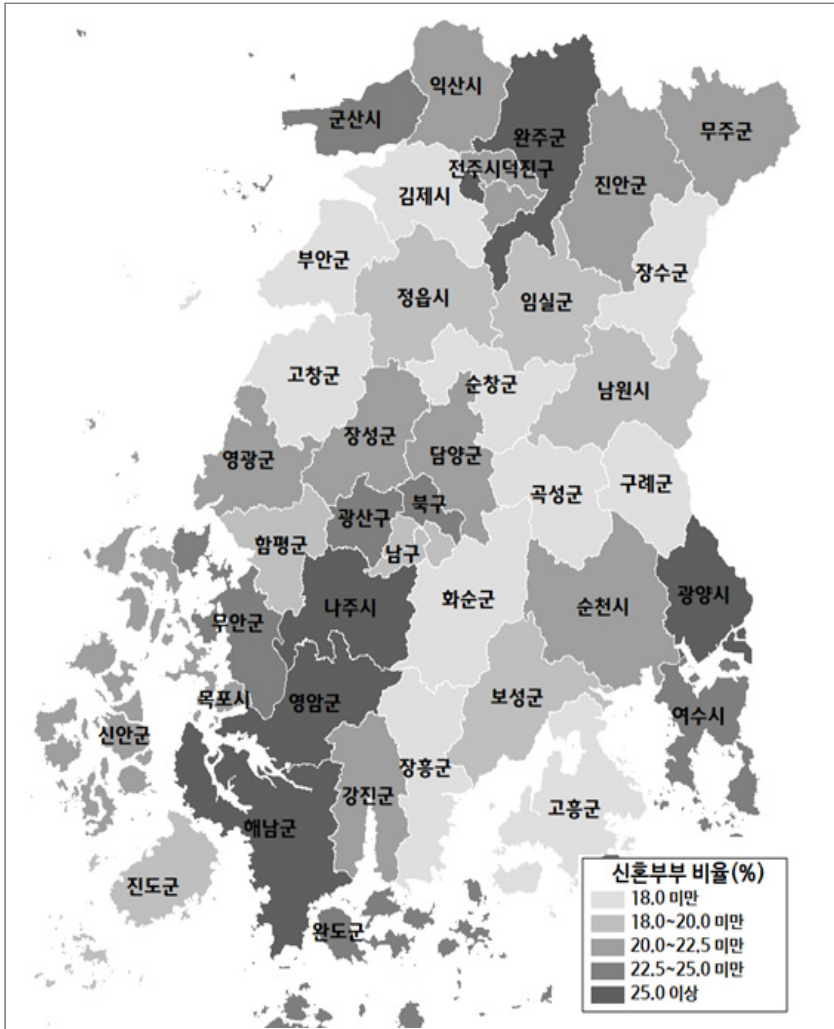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3-6]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강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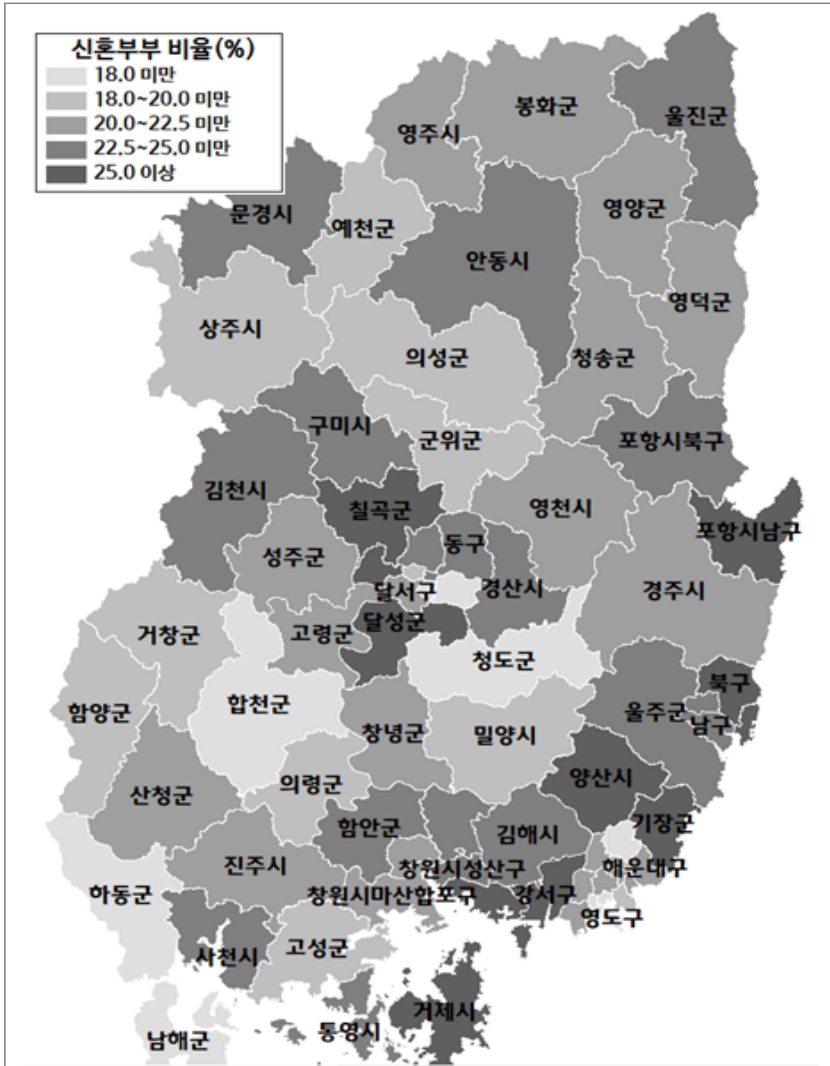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3-7]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전라, 광주), 2015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3-8] 주출산연령(25~39세)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경상, 부산, 대구, 울산), 2015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제2절 신혼부부 분포와 지역 출산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산 중 매우 많은 부분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혼부부 비율 상위 지역들의 합계출산율 순위를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3-1〉 도시 농촌 지역별 신혼부부 비율 상위 5개 지역과 합계출산율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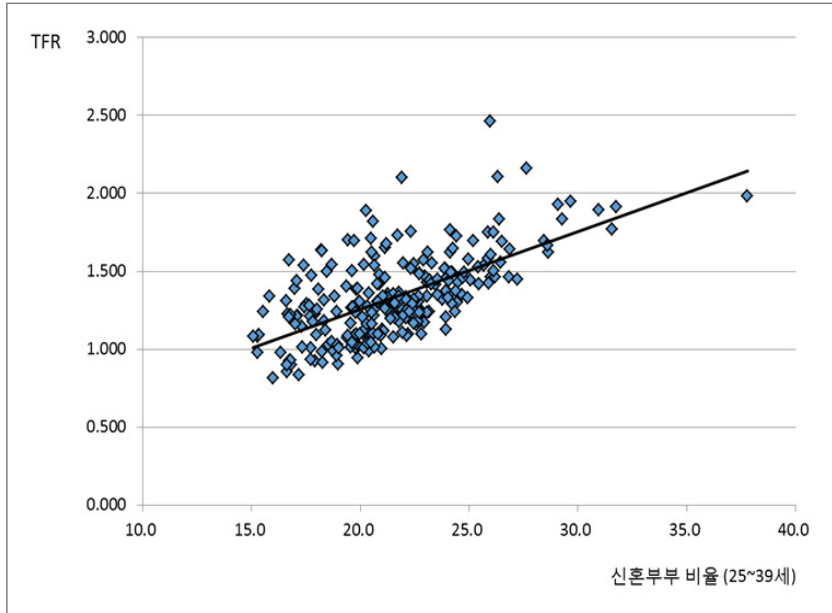
군 단위 지역			시구 단위 지역 (광역시 군 지역 포함)		
	신혼부부 비율	합계출산율 순위		신혼부부 비율	합계출산율 순위
충북 증평군	29.3	(12)	부산 강서구	37.8	(5)
강원 화천군	29.1	(7)	경남 거제시	31.8	(8)
강원 인제군	27.6	(2)	부산 기장군	31.6	(14)
전남 영암군	26.3	(3)	세종시	31.0	(9)
전남 해남군	26.0	(1)	충남 당진시	29.7	(6)

주: ()는 군 단위 지역 및 시구 단위 지역들 중 2015년 합계출산율 순위임.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앞서 분석에서 사용된 전체 시군구 지역들의 25~39세 대비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들의 합계출산율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 간의 강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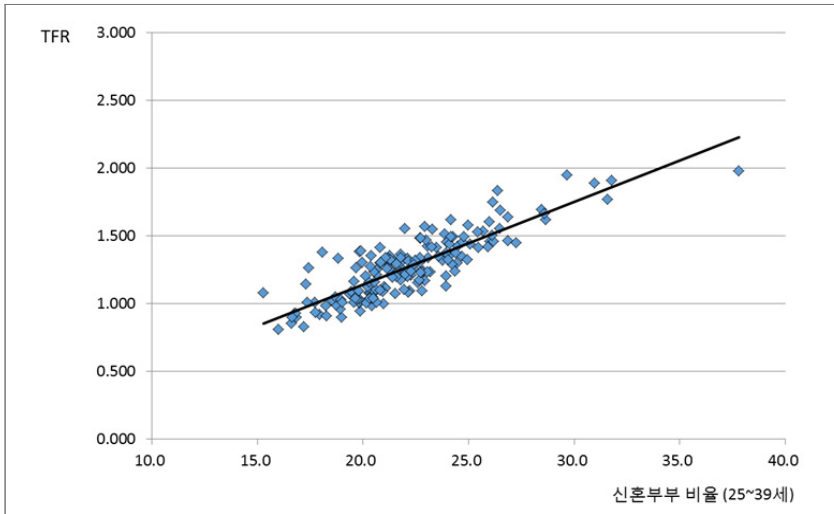
[그림 3-9]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전국), 2015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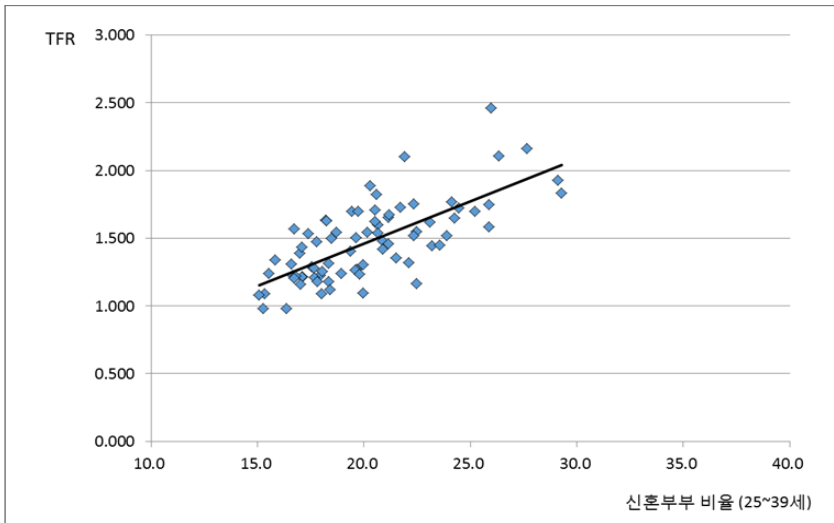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을 시 지역 및 구 지역(광역시 군 단위 지역 포함)과 일반 군 단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단지 군 단위 지역에서 전반적 분산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 간의 양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3-10]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시구 지역), 2015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3-11]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군 지역), 2015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렇다면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는 신혼부부 비율의 차이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출산율을 전국신혼부부 비율로 표준화하여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출산율(이하 표준화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다시 말해 2015년 전국 신혼부부 여성의 (연령별) 비율로 각 지역의 신혼부부 비율을 재구성하고, 각 지역의 전체 출산을 신혼부부의 출산과 비(非)신혼부부의 출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신혼부부 및 비신혼부부의 비율을 가중하여 각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전국 신혼부부 비율에 맞게 각 지역의 출산율을 표준화⁶⁾한 후에 각 시군구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여보았다.

일반 합계출산율과 표준화 출산율 산출 결과를 비교해보면 평균값에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출산율의 전체적 편차를 의미하는 밀집도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분석이 일반 합계출산율에 비해 표준화 출산율이 약 20.7%가 더 낮았다. 이는 전체 지역 간 합계출산율의 편차(밀집도 기준) 중 20% 정도가 신혼부부 비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가 무려 60.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는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통계청에서는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중, 사례수가 작음(5건 이하) 결과들에 대해서는 결과의 반출을 금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20세 미만 여성의 비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의 표준화 작업에서는 불가피하게 20세 미만 연령집단의 연령별 출산율을 포함하지 않은 채 지역별 표준화 합계출산율(이하 표준화 출산율)을 구하였다.

〈표 3-2〉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이후 출산율 분포의 변화

	일반 합계출산율		표준화 출산율	
	평균	밀집도 ²⁾	평균	밀집도 ²⁾
전국 ¹⁾	1.332	0.198	1.323	0.157
수도권	1.177	0.153	1.197	0.060
시구 지역	1.271	0.180	1.252	0.131
군 지역	1.473	0.194	1.485	0.140

주: 1) 전국 시군구의 평균값으로 전국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음.

2) 밀집도= 표준편차/평균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개별 지역들의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이후의 상대적 출산율 증감은 전체적 분포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한 예로 2015년 일반 합계 출산율 상위 10개 지역들 중 신혼부부 비율의 표준화 이후에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지역들은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경남 산청군 등 군 단위 지역 3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출산율이 낮다고 평가받는 하위 10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는데 서울 종로구, 관악구, 광진구 등 3개 서울시 구 지역만이 표준화 이후에도 하위 10개 지역에 남아 있었다. 출산율을 표준화한 이후에는 표준화 출산율 상위 지역들은 대부분 출산력이 높은 군 단위 지역들로 채워졌으며, 반대로 하위 지역들은 대부분이 시구 단위 도시 지역들, 특히 서울 지역들로 채워졌다.

이들 최상위, 최하위 지역들은 신혼부부 비율과 신혼부부의 출산율 모두에서 극단적 값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간 합계출산율 지역들의 변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223위), 경북 청도군(+172위), 충북 청주시 흥덕구(-164위) 등 15개 시군구 지역은 순위가 무려 100위 이상의 큰 변동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지역 단위 합계출산율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출산력(fertility)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신혼부부 인구 비율과 같

은 인구구성(population composition)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표 3-3〉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

일반 합계출산율		표준화 출산율		
상위 10개 지역				
1	전남 해남군	(3)	충북 제천시	(129)
2	강원 인제군	(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111)
3	전남 영암군	(12)	전남 해남군	(1)
4	전남 장성군	(4)	전남 장성군	(4)
5	부산 강서구	(84)	경남 산청군	(10)
6	충남 당진시	(55)	전북 진안군	(13)
7	강원 화천군	(56)	전남 보성군	(22)
8	경남 거제시	(83)	전북 임실군	(32)
9	세종 세종시	(57)	전남 함평군	(33)
10	경남 산청군	(5)	전남 구례군	(43)
하위 10개 지역				
1	서울 종로구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65)
2	서울 관악구	(3)	충북 청주시 청원구	(225)
3	서울 강남구	(23)	서울 관악구	(2)
4	부산 서구	(20)	서울 광진구	(6)
5	부산 영도구	(31)	서울 중구	(12)
6	서울 광진구	(4)	서울 은평구	(19)
7	서울 서대문구	(15)	경북 울릉군	(68)
8	서울 강북구	(10)	서울 마포구	(17)
9	부산 중구	(42)	서울 종로구	(1)
10	부산 동구	(36)	서울 강북구	(8)

주: ()는 표준화 이후/이전의 순위임.

자료: 통계청(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통계청(2017c)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7d) 출생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런데 거의 모든 출산이 혼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출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출산은 혼인과 출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력도 출산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은 인구구성이 아닌 혼인력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인구주택 총조사의 과거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여 신혼부부들의 이동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대부분은 같은 거주지에서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1년 차 신혼인 인구의 지난 1년 전 거주지가 현재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인 경우는 남성의 경우 66.8%(<표 3-4>), 여성의 경우는 58.4%(<표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신고의 문제나 혼인 직전 이주의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 기간을 5년으로 확장하면 남성의 같은 시군구 거주 비율은 51.4%(<표 3-6>), 여성은 46.8%(<표 3-7>)로 떨어진다. 이 수치가 이주 경험과 혼인경험을 연계하여 거주지 변화를 직접적으로 물어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를 앞서 살펴본 신혼부부 비율과 지역 출산율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하자면 지역 단위 출산율은 지역의 출산력 혹은 지역의 혼인력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인구이동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이동 방향성은 지자체의 복지지원 성과라기보다는 지역의 일자리 및 주거문제 등과 더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 정책의 성과와 단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70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표 3-4〉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남성, 1년 전 거주지 비교)

(단위: 명, %)

혼인 1년 차 남성		현재 거주지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기타 ¹⁾	계
1년 전 거주지	서울	9,349	58.1	2,965	18.4	3,788	23.5	-	16,102
	부산	2,641	70.9	588	15.8	498	13.4	-	3,727
	대구	1,872	71.1	321	12.2	441	16.7	-	2,634
	인천	2,535	67.2	361	9.6	875	23.2	-	3,771
	광주	1,346	80.8	135	8.1	184	11.1	-	1,665
	대전	1,340	72.2	104	5.6	413	22.2	-	1,857
	울산	1,456	80.8	179	9.9	167	9.3	-	1,802
	세종	104	73.2	0	0.0	38	26.8	-	142
	경기	10,358	61.7	3,506	20.9	2,913	17.4	-	16,777
	강원	1,251	81.5	115	7.5	169	11.0	-	1,535
	충북	1,186	75.3	77	4.9	312	19.8	-	1,575
	충남	1,758	73.9	204	8.6	416	17.5	-	2,378
	전북	1,200	76.5	139	8.9	229	14.6	-	1,568
	전남	977	71.4	188	13.7	204	14.9	-	1,369
	경북	1,994	77.5	189	7.3	389	15.1	-	2,572
	경남	3,125	79.9	373	9.5	415	10.6	-	3,913
	제주	497	92.9	14	2.6	24	4.5	-	535
	기타 ¹⁾	-	-	-	-	-	-	451	451
	계	42,989	66.8	9,458	14.7	11,475	17.8	451	64,373

주: 1) 기타는 북한 또는 외국인.

자료: 통계청(2017b),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3-5〉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여성, 1년 전 거주지 비교)

(단위: 명, %)

혼인 1년 차 여성		현재 거주지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기타 ¹⁾	계
1년 전 거주지	서울	8,503	51.5	2,869	17.4	5,152	31.2	-	16,524
	부산	2,283	57.8	628	15.9	1,039	26.3	-	3,950
	대구	1,617	62.2	311	12.0	672	25.8	-	2,600
	인천	2,229	60.8	404	11.0	1,033	28.2	-	3,666
	광주	1,117	68.0	160	9.7	365	22.2	-	1,642
	대전	1,063	59.8	145	8.2	569	32.0	-	1,777
	울산	1,171	73.6	159	10.0	262	16.5	-	1,592
	세종	87	64.9	0	0.0	47	35.1	-	134
	경기	8,218	56.3	3,251	22.3	3,118	21.4	-	14,587
	강원	866	71.3	97	8.0	251	20.7	-	1,214
	충북	967	68.3	103	7.3	346	24.4	-	1,416
	충남	1,314	66.0	178	8.9	499	25.1	-	1,991
	전북	917	68.0	175	13.0	257	19.1	-	1,349
	전남	829	70.3	101	8.6	249	21.1	-	1,179
	경북	1,519	63.0	234	9.7	660	27.4	-	2,413
	경남	2,310	72.4	426	13.3	456	14.3	-	3,192
	제주	436	88.3	25	5.1	33	6.7	-	494
	기타 ¹⁾	-	-	-	-	-	-	973	973
	계	35,446	58.4	9,266	15.3	15,008	24.7	973	60,693

주: 1) 기타는 북한 또는 외국인.

자료: 통계청(2017b),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72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표 3-6〉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남성, 5년 전 거주지 비교)

(단위: 명, %)

혼인 1년 차 남성		현재 거주지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기타 ¹⁾	계
5년 전 거주지	서울	7,771	47.2	3,106	18.9	5,586	33.9	-	16,463
	부산	2,316	54.9	628	14.9	1,273	30.2	-	4,217
	대구	1,628	55.7	359	12.3	935	32.0	-	2,922
	인천	2,035	57.0	309	8.7	1,228	34.4	-	3,572
	광주	1,126	67.9	150	9.0	382	23.0	-	1,658
	대전	1,029	51.6	137	6.9	829	41.6	-	1,995
	울산	1,107	69.9	167	10.5	310	19.6	-	1,584
	세종	59	46.8	0	0.0	67	53.2	-	126
	경기	7,189	49.0	3,700	25.2	3,797	25.9	-	14,686
	강원	831	57.2	167	11.5	454	31.3	-	1,452
	충북	923	52.9	115	6.6	706	40.5	-	1,744
	충남	1,134	54.5	241	11.6	704	33.9	-	2,079
	전북	968	58.2	217	13.0	478	28.7	-	1,663
	전남	781	56.2	167	12.0	441	31.7	-	1,389
	경북	1,432	56.3	266	10.5	845	33.2	-	2,543
	경남	2,352	65.7	464	13.0	766	21.4	-	3,582
	제주	398	75.0	32	6.0	101	19.0	-	531
	기타 ¹⁾	-	-	-	-	-	-	2,167	2,167
	계	33,079	51.4	10,225	15.9	18,902	29.4	2,167	64,373

주: 1) 기타는 북한 또는 외국인.

자료: 통계청(2017b),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3-7〉 신혼부부들의 인구이동 경향 추정(혼인 1년 차 여성, 5년 전 거주지 비교)

(단위: 명, %)

혼인 1년 차 여성		현재 거주지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기타 ¹⁾	계
5년 전 거주지	서울	7,169	43.8	2,942	18.0	6,251	38.2	-	16,362
	부산	2,051	49.1	662	15.8	1,467	35.1	-	4,180
	대구	1,480	49.8	379	12.7	1,114	37.5	-	2,973
	인천	1,780	52.8	379	11.2	1,214	36.0	-	3,373
	광주	1,030	59.3	164	9.4	543	31.3	-	1,737
	대전	900	49.8	142	7.9	764	42.3	-	1,806
	울산	992	66.4	159	10.6	343	23.0	-	1,494
	세종	43	55.1	0	0.0	35	44.9	-	78
	경기	5,953	45.6	3,578	27.4	3,535	27.1	-	13,066
	강원	638	53.9	148	12.5	398	33.6	-	1,184
	충북	790	54.6	96	6.6	562	38.8	-	1,448
	충남	877	47.5	257	13.9	714	38.6	-	1,848
	전북	788	51.2	201	13.1	550	35.7	-	1,539
	전남	630	54.5	144	12.4	383	33.1	-	1,157
	경북	1,164	49.9	345	14.8	822	35.3	-	2,331
	경남	1,768	58.8	514	17.1	727	24.2	-	3,009
	제주	360	77.8	25	5.4	78	16.8	-	463
	기타 ¹⁾	-	-	-	-	-	-	2,645	2,645
	계	28,413	46.8	10,135	16.7	19,500	32.1	2,645	60,693

주: 1) 기타는 북한 또는 외국인.

자료: 통계청(2017b),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제 4 장

주거생활주기 특성의
출산 결정 분석

제1절 기술 통계

제2절 분석 결과

4

주거생활주기 특성의 << 출산 결정 분석

제1절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혼인 당시 주택 관련 변수 및 가구 특성, 자산 및 부채 등이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는 혼인한 지 5년 이하의 부부 모두 초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14년 처음 조사된 이후 2016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가구는 2016년 응답 가구를 기준으로 2016년 신규 조사 가구인 혼인 1년 차 가구는 2016년 자료만을 이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고, 2016년 기준 2~5년 차 가구는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혼인 당시의 주택 관련 변수 등 여러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즉, 2016년 기준 혼인 2년 차 가구는 2015년 자료에서 혼인 1년 차 당시의 변수를 가져왔으며, 2016년 기준 혼인 3년 차 가구는 2014년 자료에서 혼인 1년 차 당시의 변수를 가져왔다.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혼인 4년 차와 5년 차는 2014년 처음 조사 당시 혼인 2년 차와 3년 차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들은 혼인 1년 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 당시 주택 관련 변수들은 2014년 조사 당시의 변수들로 대체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혼인 5년 이하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와 현재자녀수를 포함한 계획자녀수를 보면, 현재자녀수는 1명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0명, 2명 순이었으며 평균 0.8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현재 자녀를 포함한 계획자녀수는 2명이

5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명 34.4%였으며 평균 1.61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었다.

〈표 4-1〉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단위: 명, %)

	현재자녀수 ¹⁾		계획자녀수 ¹⁾	
	N	%	N	%
0명	766	35.7	104	4.9
1명	1,007	47.0	737	34.4
2명	357	16.7	1,198	55.9
3명 이상	14	0.7	105	4.9
전체	2,144	100.0	2,144	100.0
평균	0.82		1.61	

주: 1)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 대상 가구는 혼인 1년 차 33.0%, 2년 차 22.8%, 3년 차 24.4%, 4년 차 12.2%, 5년 차 7.6%였으며 혼인연차가 높아질수록 평균적으로 현재자녀수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자녀수를 포함한 계획자녀수 역시 혼인연차가 높아질수록 많았는데, 이는 혼인연차가 높은 경우 현재자녀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녀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획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당시 아내의 연령은 25~29세가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34세(40.2%)가 많았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80%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내의 혼인연령별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는 대체로 혼인연령이 어린 경우 많고, 혼인연령이 많은 경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일찍 결혼한 경우 가임기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 반면 늦게 결혼한 경우 자녀를 낳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계획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51.9%로 절반을 넘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자녀수가 적게 나타났으나, 계획자녀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경우 혼인연령이 높아져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 신혼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단위: 명, %)

	N	%	현재자녀수(명) ¹⁾	계획자녀수(명) ¹⁾
혼인연차				
1년 차	707	33.0	0.36	1.55
2년 차	488	22.8	0.71	1.49
3년 차	524	24.4	1.08	1.68
4년 차	261	12.2	1.31	1.71
5년 차	164	7.6	1.53	1.82
아내 혼인연령				
19~24세	136	6.3	1.09	1.76
25~29세	928	43.3	0.77	1.62
30~34세	861	40.2	0.87	1.63
35~39세	179	8.3	0.74	1.46
40세 이상	40	1.9	0.50	1.10
아내 학력				
고졸 이하	412	19.2	0.92	1.63
전문대 졸	620	28.9	0.84	1.59
대졸 이상	1,112	51.9	0.78	1.61
혼인 당시 거주지역				
수도권	1,183	55.2	0.80	1.53
수도권 이외	961	44.8	0.86	1.70
전체	2,144	100.0	0.82	1.61

주: 1)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 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혼인 당시 거주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이 55.2%로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에 따라 현재자녀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기술 통계는 혼인기간의 진전에 따른 출산 가능성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계획자녀수에는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계획자녀수가 많았다.

신혼가구의 주택 관련 변수에 따른 자녀수는 다음과 같다. 혼인 당시의 주택 점유형태는 전세가 54.7%로 가장 많았고, 자가 26.3%, 월세 10.7%, 무상이 8.4%로 나타났다. 혼인당시의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현재자녀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자녀수의 경우도 현재자녀수와 비슷하게 혼인 당시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이거나 월세인 경우 자가나 무상인 경우에 비해 계획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사 횟수는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가 76.1%로 가장 많았고, 한 번 이사한 경우가 20.0%였다.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는 이사 횟수가 많을수록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사 횟수가 많은 경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인 당시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나 월세 등 자가 아님인 경우, 현재도 자가 아님인 경우가 93.1%로 대부분이었으며, 자가로 변화한 경우는 6.9%에 불과하였다. 자가로 변화한 경우 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비해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가 많았는데, 점유형태가 변화한 경우 혼인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또는 자가로 변화 후 주거 안정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3〉 신혼가구의 신혼 초기 주택 관련 변수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단위: 명, %)

	N	%	현재자녀수(명) ¹⁾	계획자녀수(명) ¹⁾
혼인 당시 주택 점유형태				
자가	563	26.3	0.86	1.66
전세	1,172	54.7	0.78	1.56
월세 ²⁾	229	10.7	0.87	1.59
무상	180	8.4	0.94	1.78
이사 횟수				
없음	1,632	76.1	0.70	1.57
1회	428	20.0	1.17	1.72
2회 이상	84	3.9	1.35	1.79
주택 점유형태 변화 ³⁾				
차가→차가 그대로	1,305	93.1	0.77	1.55
차가→자가로 변화	96	6.9	1.13	1.75
전체	2,144	100.0	0.82	1.61

주: 1)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 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2) 월세에는 기타(연세, 사글세, 일세 등)가 포함되었음.

3) 주택 점유형태 변화는 혼인 당시 주택 점유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현재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로 변화했는지의 여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혼인 당시 맞벌이였던 경우는 53.7%로 외벌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는 외벌이인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 당시 주거 마련에서 남편 혹은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이나 주택 구입 비용을 상속받거나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우는 26.7%로 4분의 1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미 받았거나, 기대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경우는 7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전과 달리 부모로부터 특별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재자녀수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계획

자녀수에는 차이가 나타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에 계획자녀수가 많이 나타났다.

혼인 초기 금융기관이나 지인,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 경우는 49.5%로 절반 정도였으며, 대출이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대출이 있는 경우는 자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 신혼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

(단위: 명, %)

	N	%	현재자녀수(명) ¹⁾	계획자녀수(명) ¹⁾
혼인 당시 맞벌이 여부				
외벌이	989	46.1	1.09	1.70
맞벌이	1,151	53.7	0.59	1.53
부모로부터 주택 상속/지원 기대				
이미 받았거나 기대하지 않거나 부모님 안 계심.	1,571	73.3	0.82	1.59
기대하고 있음.	573	26.7	0.83	1.65
혼인 당시 대출/용자				
없음	1,083	50.5	0.79	1.60
있음	1,061	49.5	0.86	1.62
전체	2,144	100.0	0.82	1.61

주: 1)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 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2) 월세에는 기타(연세, 사글세, 일세 등)가 포함되었음.

3)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여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신혼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혼인 당시 가구소득과 소득 대비 부채는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은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가 적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가 많으며 맞벌이인 경우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Becker, 1965: 차경욱, 2005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이해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혼인 당시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의 소득 대비 부채는 현재 자녀가 없거나 3명 이상인 경우가 자녀가 1~2명인 경우에 비해 대체로 적게 나타났다.

〈표 4-5〉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별 가구소득 및 부채

(단위: 명, %)

	로그(log) 가구 연소득		소득 대비 부채 ¹⁾	
	N	평균	N	평균
현재자녀수 ²⁾				
0명	765	8.53	629	0.58
1명	1,003	8.37	819	1.03
2명	356	8.23	276	1.07
3명 이상	14	8.27	7	0.84
계획자녀수 ²⁾				
0명	104	8.58	86	0.63
1명	736	8.41	613	0.94
2명	1,194	8.39	954	0.85
3명 이상	104	8.33	78	0.77
전체	2,138	8.40	1,731	0.87

주: 1) 혼인 당시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만 해당됨.

2)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 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3)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여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초기 주택의 재산가(전세보증금 포함)와 신혼주거 마련에 가족 지원 정도에 따른 자녀분포를 살펴보았다.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소득에

서 한 설명과 같이 중산층에서 상대적 집중 투자를 위해 자녀수를 조절한다는 Becker(1960)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자녀수에서는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획자녀수에 있어서는 가족(부모)의 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 분석 대상이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인 상황에서 가족 지원이 완결 출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표 4-6) 신혼가구의 현재자녀수 및 계획자녀수별 주택 가격 및 가족 지원 비율

(단위: 명, %)

	N	로그(log) 주택 재산 가격 ¹⁾	주택마련 가족 지원 비율 ²⁾
현재자녀수 ³⁾			
0명	630	4.99	33.2
1명	822	4.91	27.3
2명	276	4.73	27.3
3명 이상	7	4.65	31.4
계획자녀수 ³⁾			
0명	86	5.11	27.9
1명	614	4.93	28.2
2명	957	4.89	30.2
3명 이상	78	4.80	31.7
전체	1,735	4.91	29.4

주: 1) 혼인 당시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로그(log)값임.

2) 혼인 당시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가주택비용이나 전세보증금 비용 마련 시 전체 금액 중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임.

3) 3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하여 평균 산출 함. 계획자녀수는 현재자녀수를 포함하여 총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상에서 제시된 변인들은 각 개별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분석 모델에 투입하며 여기서 모든 변인들을 포함하는 종합 분석(full model)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변인들 간에는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주기에 해당되는 각 요인들의 출산에 대한 결정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적 해석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거와 출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 분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된 변인들을 이 연구의 분석 가설에 맞춰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연구 가설 변 분석 변인 구성

연구 가설	사용 변수	생애과정 상호 작용
종속변수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주거 안정성	점유형태, 이동 횟수	점유형태 * 혼인연령
주거 마련 비용	부채 - 소득대비부채 주택비용: 로그(log)주택 재산가(전세보증금 포함) 가족 지원: 주택 구입/전세 가족 지원 비용, 장래 상속 기대	소득대비부채 * 혼인연령
주거변동	점유형태 변화	
통제변인	가구 특성: 로그(log) 가구소득,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이동 횟수 개인(부인) 특성: 혼인연령, 교육 수준	

제2절 분석 결과

〈표 4-8〉은 신혼 초 점유형태를 중심으로 출산자녀수에 대한 부분비례 오즈모형(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을 사용한 일반화 순서 로짓 분석(Generalized ordered logit)의 단계별 결정요인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표 4-8〉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0.65	0.000	-5.94	0.76	0.000	-3.80
월세	0.50	0.000	-5.26	0.28	0.000	-6.49
무상	0.90	0.346	-0.94	1.03	0.815	0.23
부인 혼인연령	0.96	0.000	-4.02	0.91	0.000	-5.45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1	0.251	-1.15	1.01	0.937	0.08
대졸 이상	0.97	0.703	-0.38	0.68	0.019	-2.35
로그(log) 가구소득	0.75	0.000	-3.67	1.06	0.303	1.03
혼인기간	2.33	0.000	32.45	1.42	0.000	5.73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4	0.000	-17.28	0.61	0.000	-7.96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41	0.000	4.38	0.48	0.000	-4.56
이사 횟수	2.12	0.000	8.83	1.60	0.008	2.67
상수향	23.90	0.000	4.52	313.25	0.000	7.88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0.65	0.000	-5.94	0.76	0.000	-3.80
월세	0.74	0.014	-2.47	0.82	0.061	-1.88
무상	0.90	0.346	-0.94	1.03	0.815	0.23
부인 혼인연령	0.98	0.051	-1.95	0.96	0.000	-5.60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1	0.251	-1.15	1.01	0.937	0.08
대졸 이상	0.97	0.703	-0.38	1.23	0.009	2.60
로그(log) 가구소득	0.78	0.000	-3.67	1.06	0.303	1.03
혼인기간	2.33	0.000	32.45	1.17	0.000	6.5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43	0.000	-10.36	0.61	0.000	-7.96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84	0.027	-2.21	0.72	0.000	-5.36
이사 횟수	1.61	0.000	8.33	1.11	0.050	1.96
상수향	0.50	0.262	-1.12	3.93	0.009	2.63

〈표 4-8〉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0.65	0.000	-5.94	0.76	0.000	-3.80
월세	2.59	0.004	2.85	0.66	0.060	-1.88
무상	0.90	0.346	-0.94	1.03	0.815	0.23
부인 혼인연령	0.91	0.011	-2.56	0.95	0.004	-2.87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1	0.251	-1.15	1.01	0.937	0.08
대졸 이상	0.97	0.703	-0.38	1.14	0.345	0.94
로그(log) 가구소득	1.23	0.223	1.22	1.06	0.303	1.03
혼인기간	2.33	0.000	32.45	1.09	0.101	1.6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34	0.008	-2.67	0.61	0.000	-7.96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66	0.093	1.68	0.89	0.385	-0.87
이사 횟수	1.07	0.771	0.29	1.35	0.002	3.14
상수항	0.00	0.000	-3.54	0.15	0.007	-2.69
Log Likelihood	-4,310.333			-4,588.164		
표본 수	2,139			2,139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 분석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례오즈 가정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패널(분석 단계)마다 고정된 추정 결과가 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분석값을 보여 준다. 점유형태에 따른 출산아수를 분석한 이 분석에서는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 모두에서 전세와 무상의 결정계수가 모든 출산 단계에서 동일하게 나왔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계수들을 보였다. 다시 말해 신혼 초 월세 입주자들에게서는 자녀의 출산 단계에 따라 자가 점유자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점유형태의 영향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체적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가에 비해 전세, 월세 모두에서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자녀수와 계획자녀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무자녀와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분석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 출산의 가능성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부터는 월세 부분에서 오즈값이 일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아 출산 가능성에 있어서는 월세 점유자가 전세 점유자는 물론이고, 오히려 자가 점유자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월세 점유자에게서 특이한 경향이 발견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례 수가 적은 상황에서 나타난 특이 현상일 수 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례들의 표집인 이 연구에서 계획자녀수보다는 둘째아 이상의 가능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 출산자녀수의 분석에서 특이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 소수의 2자녀 이상의 자녀들이 표집에 포함되면서 그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 추정 되었을 수 있다.

한편 아직 완성되지 않은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을 반영한 계획자녀수에 서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출산 이행의 가능성 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실제 현재자녀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신혼 초기의 주거 안정성이 실제 출산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 출산 의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획자녀수 분석 결과는 현재자녀수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2자녀 이하에서 3자녀 이상으로의 출산 이행에서도 자가 거주자보다 낮은 확률을 보였으며, 그 계수는 전세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 결과는 신혼의 주거 안정성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

더불어 이 영향은 출산 단계의 이행 등, 혼인생활의 진전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다.

한편 통제변인들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자녀수는 많아지고, 혼인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산자녀수가 적어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출산에 대한 연령 효과에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모의 현재 연령보다는 혼인연령 효과와 혼인기간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출산아 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출산 단계에서 유지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수도권 거주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출산아수(현재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무자녀에서 유자녀로의 이행을 살펴보면 혼인 초 수도권 거주자에게 출산의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자녀수에서는 출산의 가능성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이는 거주비용이 비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빨리 낳을 수는 있지만 아이 한 명만 출산하고 멈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둘째아 이상의 출산(현재자녀수)에서는 신혼을 수도권에서 시작했을 경우 오즈값(0.84)이 1.0보다 더 낮게 나와 비수도권 신혼부부에 비해 출산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자녀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거주 불안정성을 보이는 지표로 설정한 이사 횟수는 가설과는 달리 1자녀 이상 출산, 2자녀 이상에서 1.0보다 높은 오즈값을 보여 이동 횟수가 많을수록 실제 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특

히 둘째아 이상 출산에 있어서는 계수값이 1.0보다는 높지만 점차 낮아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무자녀에 비해 자녀 출산이 있을 경우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사 횟수 변인은 신혼 초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른 통제변수들과는 달리 신혼 초기 이후의 변화가 반영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출산에 의해 만들어진 사후적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전의 시점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이전 혹은 이후에 나타났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비록 이 분석 결과가 이사 횟수로 대표되는 주거 불안정성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지 못하였으나, 이 연구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거 이동이 출산 이전 혹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이 상당 부분 거주지 변동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자녀와 유자녀 사이에서 이사 횟수에 따른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분석이 유의미한 자산 축적이 이루어지기 힘든 혼인 초기 5년 이내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주거 이동은 가족생애 진전의 영향으로 단순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처음 거주지에서 출산 혹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상당수가 출산 및 양육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주거 상황에서 혼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음 분석 결과부터는 통제변인에 대한 결과 해석보다는 주요 결정요인(이후 음영으로 표시)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인 주거생활주기의 개념으로 보자면, 주거의 영향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진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의 주요 변인인 혼인 초 점유형태와 아내의 연령(사실상 부부연령을 반영) 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표 4-9〉)에 따르면 높은 연령에서 월세로 신혼 거주를 시작할 경우는 월세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여 실제출산아수나 계획자녀수가 더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이 주거 불안정성에 크게 제약받을 것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보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 주거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면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세와 혼인연령 간의 조절 효과에서는 자가보다 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그 계수가 그리 크지 않고,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그 효과가 유의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신혼부부가 안정적 주거로 혼인생활을 시작한다면 이들의 출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이른 연령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출산지원의 정책 효과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원이 출산지원 목표를 지향한다면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우선선발 기준 마련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른 혼인을 한 집단은 늦은 혼인집단과 연령 이외의 다른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혼인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2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표 4-9〉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혼인연령)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0.13	0.003	-2.94	0.01	0.000	-3.71
전세*부인 혼인연령	1.06	0.012	2.50	1.14	0.000	3.53
월세	14.93	0.000	3.76	1.02	0.975	0.03
월세*부인 혼인연령	0.90	0.000	-4.76	0.96	0.096	-1.67
무상	3.60	0.229	1.20	0.98	0.979	-0.03
무상*부인혼인연령	0.95	0.195	-1.29	1.03	0.397	0.85
부인 혼인연령	0.96	0.018	-2.36	0.87	0.000	-5.41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2	0.290	-1.06	1.00	0.980	0.02
대졸 이상	1.00	0.974	-0.03	0.70	0.027	-2.21
로그(log) 가구소득	0.76	0.000	-3.61	1.06	0.288	1.06
혼인기간	2.37	0.000	32.76	1.49	0.000	6.4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4	0.000	-17.35	0.56	0.000	-3.49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36	0.000	3.86	0.46	0.000	-4.64
이사 횟수	2.07	0.000	8.45	1.15	0.005	2.83
상수항	23.13	0.000	3.75	1310.53	0.000	7.33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1.64	0.472	0.72	0.23	0.011	-2.56
전세*부인 혼인연령	0.97	0.161	-1.40	1.04	0.045	2.01
월세	19.03	0.000	4.20	1.02	0.975	0.03
월세*부인 혼인연령	0.90	0.000	-4.76	0.99	0.683	-0.41
무상	330.86	0.000	5.26	0.98	0.979	-0.03
무상*부인혼인연령	0.81	0.000	-5.37	1.00	0.900	-0.13
부인 혼인연령	1.04	0.046	2.00	0.94	0.000	-3.93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2	0.290	-1.06	1.00	0.980	0.02
대졸 이상	1.00	0.974	-0.03	1.22	0.014	2.45
로그(log) 가구소득	0.77	0.000	-3.93	1.06	0.288	1.06
혼인기간	2.37	0.000	32.76	1.17	0.000	6.68
맞벌이 여부(맞벌이=1)	0.43	0.000	-10.23	0.64	0.000	-6.77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83	0.015	-2.44	0.72	0.000	-5.33
이사 횟수	1.62	0.000	8.31	1.15	0.005	2.83
상수항	0.10	0.004	-2.92	6.74	0.004	2.85

〈표 4-9〉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혼인연령)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점유형태(준거: 자가)						
전세	317.14	0.012	2.52	0.70	0.745	-0.33
전세*부인 혼인연령	0.80	0.007	-2.69	1.02	0.674	0.42
월세	67.08	0.000	5.33	1.02	0.975	0.03
월세*부인 혼인연령	0.90	0.000	-4.76	0.99	0.780	-0.28
무상	4606.34	0.082	1.74	0.98	0.979	-0.03
무상*부인 혼인연령	0.72	0.082	-1.74	1.02	0.587	0.54
부인 혼인연령	1.02	0.669	0.43	0.95	0.053	-1.9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2	0.290	-1.06	1.00	0.980	0.02
대졸 이상	1.00	0.974	-0.03	1.20	0.197	1.29
로그(log) 가구소득	1.33	0.168	1.38	1.06	0.288	1.06
혼인기간	2.37	0.000	32.76	1.08	0.144	1.46
맞벌이 여부(맞벌이=1)	0.36	0.015	-2.44	0.45	0.000	-5.55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59	0.133	1.50	0.83	0.161	-1.40
이사 횟수	1.10	0.659	0.44	1.15	0.005	2.83
상수항	0.00	0.000	-4.98	0.15	0.042	-2.03
Log Likelihood	-4,270.614			-4,570.933		
표본 수	2,139			2,139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으로 주거 관련 부채 규모와 자녀 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부채 규모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에 ‘부채가 많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그동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무자녀와 1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의 비교에서는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표 4-10〉). 특히 이러한 경향이 현재자녀수뿐만 아니라, 계획자녀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잠재적 혹은 미래의 기대 포함)가 있어야 부채를 얻을 수 있다’라는 통념적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처음부터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 중에서 주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현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에서 일부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현재자녀수가 1 이상인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고, 계수의 크기도 무자녀 대비 유자녀 비교 분석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첫 자녀 출산 이후에는 부채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획자녀수에 있어서는 현재자녀수와 마찬가지로 무자녀와 유자녀 비교 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산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 규모가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채 수준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혼인 초기 단계에서 자녀 출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첫째아 출산에 부채 수준이 출산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일부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여 부채의 효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추가 자녀 출산에는 특별히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계획자녀수 분석 결과가 제시하듯이 장기적으로는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부채는 신혼부부의 혼인생활 시작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더

라도, 소득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선다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출 확대를 통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은 신혼의 시작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있어도, 계속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녀 출산을 지원하려는 저출산 정책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표 4-10〉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87	0.142	-1.47	0.91	0.644	-0.46
소득 대비 부채	1.35	0.000	5.96	1.19	0.074	1.78
부인 혼인연령	1.01	0.551	0.60	0.96	0.000	-4.21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47	0.32	1.89	0.005	2.78
대졸 이상	1.14	0.163	1.39	1.13	0.175	1.36
로그(log) 가구소득	0.82	0.041	-2.04	0.86	0.026	-2.23
혼인기간	2.41	0.000	29.08	1.63	0.000	6.3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4	0.000	-15.01	0.61	0.010	-2.57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28	0.005	2.80	0.40	0.000	-4.55
이사 횟수	1.79	0.000	6.05	1.16	0.012	2.52
상수항	1.84	0.483	0.70	161.38	0.000	7.21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61	0.000	-5.14	0.68	0.000	-4.94
소득 대비 부채	0.98	0.198	-1.29	0.97	0.020	-2.32
부인 혼인연령	1.01	0.551	0.60	0.96	0.000	-4.21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47	0.32	0.88	0.207	-1.26
대졸 이상	1.14	0.163	1.39	1.13	0.175	1.36
log 가구소득	0.64	0.000	-4.72	0.86	0.026	-2.23
혼인기간	2.41	0.000	29.08	1.19	0.000	6.47
맞벌이 여부(맞벌이=1)	0.44	0.000	-8.47	0.70	0.000	-4.90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93	0.388	-0.86	0.74	0.000	-4.25
이사 횟수	1.51	0.000	6.00	1.16	0.012	2.52
상수항	1.03	0.968	0.04	19.88	0.000	4.70

〈표 4-10〉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1.01	0.977	0.03	1.06	0.729	0.35
소득 대비 부채	1.15	0.208	1.26	0.90	0.053	-1.93
부인 혼인연령	1.01	0.551	0.60	0.96	0.000	-4.21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47	0.32	0.57	0.004	-2.90
대졸 이상	1.14	0.163	1.39	1.13	0.175	1.36
로그(log) 가구소득	3.11	0.019	2.36	0.86	0.026	-2.23
혼인기간	2.41	0.000	29.08	1.08	0.198	1.29
맞벌이 여부(맞벌이=1)	0.34	0.015	-2.42	0.42	0.000	-5.25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24	0.581	0.55	0.80	0.152	-1.43
이사 횟수	0.78	0.455	-0.75	1.16	0.012	2.52
상수항	0.00	0.000	-4.22	0.75	0.675	-0.42
Log Likelihood	-3,322.591			-3,585.658		
표본 수	1,732			1,732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으로 앞서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부채의 규모와 혼인연령 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부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혼인연령의 뚜렷한 조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패널에서 오즈비는 1.0에 근접하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 자녀의 수 1명 이하인 경우와 2명 이상의 출산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미세하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부부들 사이에서 1자녀 출산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낮은 연령에 혼인한 부부에게는 부채가 첫째아 이후 추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혼인연령)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86	0.134	-1.50	0.91	0.645	-0.46
소득 대비 부채	1.30	0.070	1.81	1.19	0.293	1.05
소득 대비 부채*부인 혼인연령	1.00	0.791	0.26	1.00	0.976	-0.03
부인 혼인연령	1.00	0.990	-0.01	0.96	0.000	-3.8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84	0.27	1.89	0.005	2.78
대졸 이상	1.14	0.154	1.42	1.13	0.175	1.36
로그(log) 가구소득	0.82	0.047	-1.98	0.86	0.027	-2.21
혼인기간	2.42	0.000	29.11	1.63	0.000	6.3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4	0.000	-15.01	0.61	0.010	-2.57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28	0.005	2.80	0.40	0.000	-4.55
이사 횟수	1.79	0.000	6.02	1.16	0.012	2.52
상수항	2.06	0.421	0.81	160.42	0.000	6.93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62	0.000	-4.88	0.68	0.000	-4.91
소득 대비 부채	1.30	0.070	1.81	0.97	0.831	-0.21
소득 대비 부채*부인 혼인연령	0.99	0.054	-1.92	1.00	0.976	-0.03
부인 혼인연령	1.02	0.063	1.86	0.96	0.000	-3.8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84	0.27	0.88	0.207	-1.26
대졸 이상	1.14	0.154	1.42	1.13	0.175	1.36
로그(log) 가구소득	0.65	0.000	-4.45	0.86	0.027	-2.21
혼인기간	2.42	0.000	29.11	1.19	0.000	6.47
맞벌이 여부(맞벌이=1)	0.45	0.000	-8.42	0.70	0.000	-4.90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91	0.298	-1.04	0.74	0.000	-4.24
이사 횟수	1.50	0.000	5.94	1.16	0.012	2.52
상수항	0.48	0.408	-0.83	19.76	0.000	4.48
Log Likelihood	-3,317.590			-3,585.66		
표본 수	1,732			1,732		

〈표 4-11〉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주거 관련 부채*혼인연령)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92	0.836	-0.21	1.06	0.729	0.35
소득 대비 부채	1.30	0.070	1.81	0.90	0.463	-0.73
소득 대비 부채*부인 혼인연령	1.00	0.613	-0.51	1.00	0.976	-0.03
부인 혼인연령	0.89	0.055	-1.92	0.96	0.000	-3.8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3	0.784	0.27	0.57	0.004	-2.90
대졸 이상	1.14	0.154	1.42	1.13	0.175	1.36
로그(log) 가구소득	3.92	0.006	2.75	0.86	0.027	-2.21
혼인기간	2.42	0.000	29.11	1.08	0.198	1.29
맞벌이 여부(맞벌이=1)	0.37	0.025	-2.25	0.42	0.000	-5.25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29	0.513	0.65	0.80	0.152	-1.43
이사 횟수	0.75	0.395	-0.85	1.16	0.012	2.52
상수항	0.00	0.000	-3.87	0.75	0.681	-0.41
Log Likelihood	-3,317.590			-3,585.66		
표본 수	1,732			1,732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우리나라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하게 높은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미혼 청년들의 근로소득만으로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신혼 초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와 전세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초기 주거비 지원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표 4-12〉).

이 분석에서 월세인 경우를 제외한 것은 초기비용(보증금)의 규모가 자가나 전세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 효과가 과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택비용이 높을수록 부모 지원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의 효과를 구분하고자 분석에서는 초기 주택비용을 통제변수로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현재의 부모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기대도 부모 주거비 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산에 대한 기대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4-12〉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가족 지원)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88	0.237	-1.18	0.68	0.000	-4.77
주택 구입/임차 가족 지원 비율	1.00	0.238	-1.18	1.00	0.108	1.61
로그(log) 주택 재산가	0.98	0.837	-0.21	0.88	0.062	-1.87
주택상속/지원 기대(기대/기지원=1)	0.98	0.788	-0.27	1.27	0.002	3.10
소득 대비 부채	1.34	0.000	5.45	1.16	0.143	1.47
부인 혼인연령	1.00	0.590	0.54	0.97	0.000	-3.93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13	0.315	1.00	1.85	0.008	2.66
대졸 이상	1.20	0.056	1.91	1.13	0.169	1.38
로그(log) 가구소득	0.84	0.190	-1.31	0.57	0.034	-2.12
혼인기간	2.39	0.000	28.25	1.57	0.000	5.86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4	0.000	-14.38	0.63	0.000	-6.2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19	0.022	2.30	0.45	0.000	-3.91
이사 횟수	1.78	0.000	5.96	1.16	0.013	2.47
상수항	1.79	0.612	0.51	10122.20	0.000	4.03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48	0.000	-7.02	0.68	0.000	-4.77
주택 구입/임차 가족 지원 비율	1.00	0.238	-1.18	1.00	0.108	1.61
로그(log) 주택 재산가	0.65	0.000	-4.64	0.88	0.062	-1.87
주택상속/지원 기대(기대/기지원=1)	0.98	0.788	-0.27	1.27	0.002	3.10
소득 대비 부채	1.00	0.836	-0.21	0.98	0.258	-1.13
부인 혼인연령	1.00	0.590	0.54	0.97	0.000	-3.93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99	0.910	-0.11	0.89	0.244	-1.16
대졸 이상	1.20	0.056	1.91	1.13	0.169	1.38
로그(log) 가구소득	0.80	0.064	-1.85	1.01	0.951	0.06
혼인기간	2.39	0.000	28.25	1.18	0.000	6.03
맞벌이 여부(맞벌이=1)	0.41	0.000	-8.79	0.63	0.000	-6.2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19	0.022	2.30	0.76	0.000	-3.63
이사 횟수	1.48	0.000	5.70	1.16	0.013	2.47
상수항	1.36	0.758	0.31	8.73	0.011	2.54

〈표 4-12〉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가족 지원)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점유형태 전세(자가=0)	0.81	0.599	-0.53	0.68	0.000	-4.77
주택 구입/임차 가족 지원 비율	1.00	0.238	-1.18	1.00	0.108	1.61
로그(log) 주택 재산가	0.55	0.139	-1.48	0.88	0.062	-1.87
주택상속/지원 기대(기대/기지원=1)	0.98	0.788	-0.27	1.27	0.002	3.10
소득 대비 부채	1.24	0.064	1.85	0.85	0.005	-2.81
부인 혼인연령	1.00	0.590	0.54	0.97	0.000	-3.93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2.35	0.027	2.21	0.55	0.002	-3.02
대졸 이상	1.20	0.056	1.91	1.13	0.169	1.38
로그(log) 가구소득	5.43	0.002	3.14	0.54	0.001	-3.39
혼인기간	2.39	0.000	28.25	1.07	0.233	1.19
맞벌이 여부(맞벌이=1)	0.35	0.014	-2.46	0.63	0.000	-6.2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19	0.022	2.30	0.93	0.615	-0.50
이사 횟수	0.73	0.337	-0.96	1.16	0.013	2.47
상수항	0.00	0.000	-4.66	60.69	0.008	2.64
Log Likelihood	-3,306.488			-3,569.755		
표본 수	1,729			1,729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출산(현재자녀수)에서 무자녀에서 유자녀로의 이행 시 가족의 지원 정도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재산가는 2자녀 이상의 출산 이행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Becker(1960)의 상대투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지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 출산 비율이 높은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는 우리나라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특성에서 나타난 측정 오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혼인 이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

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높은 주택비용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근로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그 초기 주거비용이 상당 부분 부모로부터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자산(보증금 등)이 혼인 초기 주거마련에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가족 지원으로 측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부모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같은 분석을 실시하면 신혼 초기 주거 마련에 가족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첫째아 이후 그 이상의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해서는 계수가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이행하는 데에 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은 최소 자녀 한 명 출산이 보편적인 우리 문화와 관련되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주거지원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기대는 신혼부부들의 실제 출산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 출산 단계를 보여주는 모든 패널들에서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 이전의 효과는 앞으로의 완결출산을 의미하는 계획자녀수에서는 반대 방향의 영향력을 보였다. 신혼 초 주거 마련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계획자녀수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반대로 앞으로 부모로부터의 유산에 대한 기대는 모든 단계에서 계획자녀수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원은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계획자녀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유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 계획자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지원은 실제 실현과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보였다. 주거 마련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유산 기대는 실

제 출산에 대해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획자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이 최종적으로는 출산 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혼 주거가 차가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점유형태 변화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표 4-13〉). 이 분석에서는 점유형태의 변화에서 비레오즈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패널에서 같은 오즈비를 보인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차가 주택에서 자가 주택으로의 점유형태 변화가 자녀수 단계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의 가능성 자체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계획 자녀수에 있어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변화)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자녀 없음 vs 1자녀 이상〉						
차가→자가 (준거: 차가→ 차가)	0.73	0.023	-2.27	1.23	0.141	1.47
대출/용자 유무(있음=1)	1.39	0.000	3.52	1.09	0.227	1.21
부인 혼인연령	0.97	0.028	-2.20	0.92	0.000	-4.3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5	0.628	0.48	0.89	0.665	-0.43
대졸 이상	1.01	0.932	0.08	0.68	0.126	-1.53
로그(log) 가구소득	0.70	0.003	-2.93	0.82	0.448	-0.76
혼인기간	2.22	0.000	24.48	1.17	0.000	5.5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29	0.000	-11.65	0.66	0.000	-5.1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1.36	0.001	3.22	0.71	0.000	-4.65
이사 횟수	2.47	0.000	8.33	2.26	0.000	3.61
상수항	15.77	0.009	2.63	1473.82	0.001	3.36

〈표 4-13〉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결정모형(점유형태 변화) (계속)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Odds Ratio	P value	Z	Odds Ratio	P value	Z
〈1자녀 이하 vs 2자녀 이상〉						
차가→자가 (준거: 차가→ 차가)	0.73	0.023	-2.27	1.23	0.141	1.47
대출/융자 유무(있음=1)	1.03	0.741	0.33	1.09	0.227	1.21
부인 혼인연령	0.99	0.320	-0.99	0.97	0.000	-3.58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5	0.628	0.48	0.96	0.676	-0.42
대졸 이상	1.01	0.932	0.08	1.22	0.041	2.04
로그(log) 가구소득	0.65	0.000	-3.53	1.04	0.687	0.40
혼인기간	2.22	0.000	24.48	1.17	0.000	5.5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54	0.000	-5.68	0.66	0.000	-5.1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84	0.071	-1.81	0.71	0.000	-4.65
이사 횟수	1.72	0.000	7.47	1.14	0.048	1.98
상수항	1.25	0.824	0.22	2.45	0.253	1.14
〈2자녀 이하 vs 3자녀 이상〉						
차가→자가 (준거: 차가→ 차가)	0.73	0.023	-2.27	1.23	0.141	1.47
대출/융자 유무(있음=1)	0.45	0.030	-2.17	1.09	0.227	1.21
부인 혼인연령	0.82	0.001	-3.39	0.96	0.083	-1.74
부인 교육 수준(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1.05	0.628	0.48	0.54	0.006	-2.77
대졸 이상	1.01	0.932	0.08	0.82	0.322	-0.99
로그(log) 가구소득	3.47	0.018	2.36	0.60	0.002	-3.03
혼인기간	2.22	0.000	24.48	1.17	0.000	5.54
맞벌이 여부(맞벌이=1)	0.13	0.001	-3.32	0.66	0.000	-5.14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거주=1)	0.79	0.507	-0.66	0.71	0.000	-4.65
이사 횟수	1.34	0.224	1.22	1.26	0.051	1.95
상수항	0.00	0.003	-2.98	9.45	0.118	1.56
Log Likelihood	-2,788.230			-3,049.238		
표본 수	1,397			1,397		

자료: 국토교통부(2014-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3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주거와 출산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주거 안정의 중요성 등과 같은 주거가 출산에서 갖는 복잡한 상관성을 잘 보여 준다. 내 집 마련 비용이 많이 드는 차가에서 자가로의 주거 점유형태 변화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을 주거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연기 혹은 기피하게 되어 실제 출산자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자가로의 전환 이후에는 앞서 분석들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 추가 자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차가에서 자가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연기 효과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가로의 전환이 반드시 연기된 출산을 만회하거나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보여 주듯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가로의 전환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연기된 출산의 만회나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 결과가 보여 준 부채의 부정적 효과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연령과의 조절 효과에서 나타나듯이 부채 상환의 부담이 남아 있게 된다면 이 역시 추가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분석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과거의 주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시점에만 준거한 횡단적 점유형태에 대한 분석이 출산과 주거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 특성, 특히 점유형태와 출산 간의 연관성 분석에서 생애과정의 단계와 진행을 반영하는 종단적 이해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점유형태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분석에서도 점유형태의 특성을 단순히 자원의 크기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출산지원으로서의 주거정책 방향성

제2절 맺음말

제1절 출산지원으로서의 주거정책 방향성

지금까지 이 연구는 주거와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거생활주기’라는 분석 개념을 바탕으로, 주거 관련 요인들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신혼 초기의 주거 특성은 계속적으로 출산 가능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대부분 혼인 초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들과 혼인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의 출산 결과 혹은 앞으로의 추가 출산 계획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 안정성은 출산에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의 가설 설정에서 주거 안정성의 지표로 생각했던 이동(이사) 횟수는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핵심 지표인 주거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전세-월세의 순으로 출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의 단계별 이행이나 혼인연령 등 혼인생활 진전 혹은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에 따라 주거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 분석 방법인 출산 단계별로 구분된 분석 패널에 따라 다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연령과의 조절 효과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 점유형태로 나타나는 주거 안정성뿐만 아니라 부채, 가족의 주거지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이 혼인을 시작한 주택에서 출산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동(이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또한 자가로의 점유형태 전이가 출산을 유보하는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거비 마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원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출산 양육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지원은 다시 출산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채는 출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혼 초기의 주거마련을 위한 부채 수준은(첫째아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비 상승이나 자가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출산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출산지원의 목적을 갖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지원

우선 신혼부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출산지원 정책으로서의 주거지

원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대상의 선정에서 차별성을 주거나 혹은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신혼부부의 연령, 경제적 상태, 지역, 가족 지원 등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상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의 정책 수요가 이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대출 중심의 주거지원 지양

현재 우리나라 신혼부부 주거지원에서 대출 지원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대출의 확대는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전세비 상승과 같이 대출의 확대가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강화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의 공급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임대료 상승 억제와 같은 정책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신혼부부 주거문제의 연속성 반영

신혼부부의 주거는 혼인단계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등 혼인 생활의 진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혼인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위주의 정책이나, 너무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 제공은 수요자의 생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혼인 초기로 제한하는 것은 출산을 적극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 확장 또는 자녀양육 등 생애과정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거시적 주택시장 정책

무엇보다도 주거 개별 수요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주거안정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거와 관련된 출산 저해는 결국 주거비용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부채 상환 및 이자 부담은 계속적 출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은 주거 마련을 위해 가족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저출산의 문제가 신혼부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경제 수준과도 연계된 불평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거시적 정책 운영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서 주거문제가 핵심적 요인이므로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출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조치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이 가시적 성과를 낳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인식으로 바뀐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식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책들은 지양될 것이다.

더불어 해외 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 주택을 주택시

장의 한 축으로 세우려는 거시적 측면의 주거정책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출 지원과 같이 주거비용 일부 지원에 그치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세대의 주거와 연관된 지역 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주택·양육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주택 문제 이외에도 신혼부부 인구분석을 통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점들은 다시 신혼부부의 주거정책의 방향성에도 연관된다.

5. 지자체의 지역 단위 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 전환

우선 지역 단위 출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인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를 출산 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여기면서 지역 단위 출산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신혼부부 비율과 같은 인구학적 맥락들을 배제한 채 지역 단위 합계출산율만 나열하여 출산력을 판단하거나, 나열된 출산율로 지역들을 단순하게 유형화하기도 한다. 더불어 지역 출산력의 문제를 정책 효과의 결과물로 단순화하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가 지역의 출산율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신혼부부 유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의 유입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제로섬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구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인구 문제 중 하나이며 이 문제는 전국 단위의 인구 수준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결과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전

체 인구 수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역 산업단지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지역 산업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주거·양육 지원 방안들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젊은 인구 및 신혼부부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 제공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면서 주거가 갖는 사회적 특성들은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주택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생활 속의 요구들에 부합하는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실제로 앞서 논의한 일본과 싱가포르 주택정책에서는 이러한 주거의 지역성 확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우리의 주택 발전 과정에서 크게 약화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지역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중심에서 민간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

6. 지역 출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

지자체 차원의 신혼부부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거주가 일자리나 주택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수준의 인구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지방 인구 변동 및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합계출산율이 1.0보다 낮거나, 이에 근접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출산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 수준의 출산율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최근의 지역 인구의 변화 동향을 보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불균형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인구 분포의 차별성 역시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불균형 문제, 지역 단위 신혼부부 및 청년 인구 문제 등도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인구 문제 관련 의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7. 도시재생 정책에서 신혼부부 적극 고려

지금까지 지역 발전 정책에서 지역 재개발이 핵심 방안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 재개발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구학적으로도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아 지역 인구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에 신혼부부 주거 수요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세대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책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와 생활과 관련된 요구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가, 정책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의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맺음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주거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과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 연구는 주거와 출산의 관계를 단선적 영향력의 차원을 넘어선 주거생활주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거의 영향력과 혼인생활의 진전을 반영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 프레임을 이용하여 같은 주거 특성이라도 혼인생활의 단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혼인 초기 주택 점유형태와 혼인연령 간의 상호작용,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채의 부정적 효과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우리나라의 신혼부부들이 향후 거주지 이전을 전제로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있음을 이동(이사) 횟수와 출산 간의 상관성 분석으로 보여 줄 수 있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생활을 단세대적 접근을 넘어 가족의 주거지원 효과를 살펴본 것도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기대가 실제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계획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발견 역시 세대 간의 관계를 확대하여 주거 영향력을 분석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아수 분석에서 일부 기존 연구들이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발전된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통계적 가정에 한층 더 충실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이 연구가 제안하는 주거생활주기의 개념에 더욱 적합한 분석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

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부채가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자녀수의 단계 진전에 따라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이동하는 초기 단계에만 작동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생애단계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강미나, 박미선. (2013).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No.445, 1-8.
- 관계부처 합동. (2017).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토교통부. (2014).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1차년도 원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차년도 원자료.
- 국토교통부. (2016).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3차년도 원자료.
- 국토교통부. (2017. 3. 7.).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51-78.
- 대한민국정부.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 두성규, 김현아. (2012).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문승엽, 최정민. (2016). 친육아주택 인증제도 고찰 및 도입 방안 연구. *주거환경*, 31, 23-39.
-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백승기. (2016).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공급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32(2), 89-108.
- 서미숙. (2013).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1), 63-79.

- 신윤정. (2014). 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211호, 83-95.
- 윤윤정, 천현숙. (2013). 일본의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과 지역육아지원거점 사업. *국토*, 375, 118-128.
- 윤주현, 강미나, 박천규. (2006).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118호, 1-6.
- 윤혜영, 유해연. (2014). 일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지원제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0권 제1호(통권303호), 3-14.
-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39-71.
- 이상림, 강은나, 오신휘, 전홍규, 이한나, 박소정 등. (2016).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숙, 전은정, 안소미. (2016). 일본 정부와 민간의 육아지원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1126-1134.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등.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19-31.
- 천현숙, 김영표, 정희남, 김혜승, 하수정, 김진범 등. (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I) -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17a).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
- 통계청. (2017b).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 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 통계청. (2017d). 출생통계(각 연도).
- 통계청. (2017e). 혼인통계(각 연도).
- 하세가와 히로시. (2015). *일본 젊은 세대의 주거의식과 신혼 및 육아세대 주택 지원정책*.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색 한일 국제심포지엄. 주택 토지연구원.
-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Eds.)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9-231.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45, 493-517. 차경욱.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3에서 재인용.
- Easterlin, R. A. (1980).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New York: Basic Books.
- Lutz, W., Skirbekk, V., & Testa, M. R.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67-192.
- Wang, W., & Famoye, F. (1997). Modeling household fertility decisions with generalized Poisson regress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0(3), 273-283.
- Williams, R. (2006). Generalized ordered logit/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s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Stata Journal*. 6(1), 58-82.
- 国土交通省(2016). 住生活基本計画(全国計画).

〈인터넷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sh.co.kr>)

싱가포르 정부 M&P Packages 홈페이지(www.heybaby.sg/mppackage)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